

Left21.com

2010년 2월 27일 ~ 3월 12일 | 제26호 | 값 1,800원

리포트21

그리스 노동자 2백만 명 총파업

그리스의 저항 정신을 한국으로

2월 24일 그리스 노동자 2백만 명이 노동자가 아니라 부자와 기업주들이 경제 위기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레프트21〉이 인쇄에 들어가는 2월 24일 노동자 총파업이 그리스를 마비시켰다. 비행기·열차·여객선이 멈췄고 은행·학교·관공서가 문을 닫았다. 각종 외신 보도에 따르면 2백만 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프랑스·스페인·포르투갈 등으로 번져가고 있다.

〈레프트21〉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 주는 이 가슴 벅찬 소식을 온라인(www.left21.com)을 통해 계속 보도할 예정이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2월 24일 총파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다른 유럽 나라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고 파업 행동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전 유럽이 난리가 났다. 사장들은 노동자들이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장들은 지금 갈수록 커지는 반발에 직면해 있다.

2월 24일 그리스 총파업은 유럽의 사장, 정부와 지도자 들의 결정에 맞선 일련의 투쟁들 중 가장 최신의 것이다.

2주 전에는 그리스의 거의 모든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지난주에는 거의 매일 다양한 부문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이제 민간 부문 노조들도 투쟁에 동참했다.

한편, 스페인 노조들도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공격하는 경제 정책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스페인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는 나랏돈을 아낀다며 노동자들의 정년 연령을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스페인 노동자들 수만 명이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이번 주 화요일[2월 23일] 시위를 벌였다.

재정적자

국제 은행가와 유럽연합 지도자 들의 압력을 받아 그리스 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려고 급격한 긴축 정책을 펴려 한다.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는 현재 그리스 국내총생산(GDP)의 12.7퍼센트에 이른다. 그리스 정부는 적자 규모를 2.8퍼센트로 줄이려 한다.

이를 위해 그리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수당을 10퍼센트 삭감하고 정년을 연장하려 한다.

이것이 통과되면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도자들과 IMF는 그리스 정부에게 긴축의 강도를 더 높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엄청난 저항 때문에 저들의 계획이 위협받고 있다.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 노총은 수요일[24일] 이후 다음 행동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3월 중순에 또 한 번 행동의 날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노동자 운동 내에서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할지를 놓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법원이 조세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자 노조 지도

부가 파업을 취소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이 결정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재정부 노동자들의 파업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만약 IMF와 유럽연합이 더 거칠게 나오면서 긴축 계획을 밀어붙이라고 그리스 정부에 더 큰 압력을 넣는다면 지금보다 더 큰 노동자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튜 쿨슨(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기자)

번역 김용욱 기자

MBC노조 파업 결의

정부의 방송 장악 기도에 저항하는 MBC 노동자들

MBC 사장 엄기영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이명박 정부의 MBC 장악이 가시화하고 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2월 26일 새 사장을 선임하기로 했고, 새 사장은 3월 8일 취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YTN, KBS에서 진행한 수순대로 ‘낙하산 사장’ 임명을 통해 방송을 장악하고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민주당 의원 조용택은 청와대가 MBC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 정황을 폭로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장 후보군은 고려대 출신인 이명박 측근과 이명박의 대선 언론 특보를 비롯해, 보수 성향의 인물로 가득하다.

MBC 노동자들은 정부의 이런 MBC 장악 시도에 맞서 75.9퍼센트가 찬성해 파업을 결의했다.

MBC 노조는 새 사장이 누가 되든 “방문진이라고 하는 악의 인큐베이터에서 길러진 사람”(이근행 위원장)이라며 투쟁할 태세다. 그래서 보수 성향의 방문진

이사를 퇴진도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반민주 정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만한 비판 언론을 길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갖 탄압을 하고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는 것이다.

이미 이명박 언론 특보 출신 김인규가 KBS 사장으로 임명된 후, KBS는 노골적으로 한나라당 정치인을 홍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MBC 조합원들은 ‘낙하산 사장’이 내려오면 MBC의 권력 비판적 목소리가 완전히 차단될 것이라 걱정하

고 있다.

〈레프트21〉과 한 인터뷰에서 기자인 정우영 조합원은 “외부압력이 있으면 보도하는 데 자기 검열하고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PD수첩〉때문에 정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은 이춘근 조합원은 “양심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라며 “조합원들은 1980년대처럼 부끄러웠던 시절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 3면으로 이어짐

세상을 이끄는 명

“청소년들의 졸업식 뒤풀이 모습은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 대통령인 저부터 회초리를
맞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명박, 생각을 실행에 옮기도록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
여가 낳은 결실[로] ... 동계올
림픽에서 기적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갓다 붙이기 잘하는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

“진보그룹이 대한민국이 금메
달을 따는 데 자꾸 방해하는
어떤 세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 주성영

손범규: “붉은 군대가 내려오
면 이런 판결을 내린 사람이
니 봐달라고 할 것이냐”

최병국: “친일파가 득세하는
나라에서 왜 판사 하나, 북한
에 가서 김일성 수령을 모시
든가 하지”

‘통일교사’ 국가보안법 무죄
선고에 불평하는 한나라당 의원들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 주냐,
어느 년 좋으라고. 그러니 분
당도 마찬가지지”

한나라당 친이계 진수희,
막장으로 가는 세종시 아귀다툼

“봉사는 그의 평생 덕목! 김
문수” “소통과 화합의 대명
사! 주호영” “의리로 뭉쳐진
국민의 친구! 정진석”

KBS의 낮7시 한나라당 띄우기

“민주노동당에 대한 서버침탈
이 정당하다면 겸 · 경은 영화
<아바타>를 집에서 봤다는 정운
찬 총리도 수사하고 증거인멸
을 이유로 정 총리의 컴퓨터하
드를 즉각 압수수색해야 한다”

최형익 한산대 교수

“1970년 22살 청년 전태일이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며 분신 자살
한 후 17년 만에 죽창 · 화염
병으로 무장한 과격 노동운동
이 불타 올랐다. 20대, 30대
가 가난해지기 시작한 지 별
써 10여 년이 흘렀다”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의 걱정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존폐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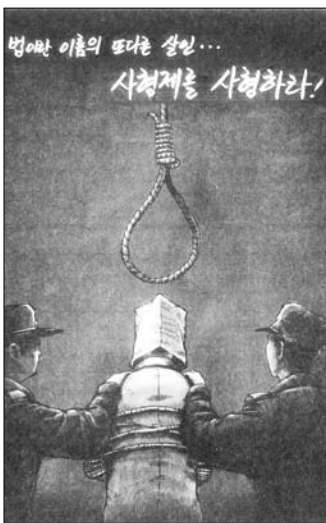
사형제는 폐지돼야 한다

2월 25일, 사형제가 헌법재판
소 심판대 위에 다시 오른다.

한국은 1997년 이래로 12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
질적 사형폐지국’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형 집행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흥흥한 소문이 돌자 공포심에
질린 사형수 두 명이 스스로 목숨
을 끊었다.

사형제 존치론자들은 흉악범
죄 예방을 위해 사형이 필요하
다고 주장한다.



사형은 국가가 조직하는 살인이다

사진: 제10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정의연대와연희 사형제폐지추진위원회

그러나 한국 정부는 1949년부
터 1997년까지 사형수 9백20명
을 죽였지만, 사형 집행은 흉악범
죄 증감과는 별 관계가 없었다.

유엔은 두 차례 사형제와 살
인율의 상관관계를 조사했고
사형제가 살인 억제력이 있다
는 가설은 근거없다고 결론 내
렸다.

미국은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만, 연간 살
인 사건이 10만 건 이상 벌어진
다.

게다가 오심 가능성은 늘 있고,
하층민에 대한 편견과 사회 통제

인권에는 관심 없는 대북압박용 북한인권법안

2월 1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됐다.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를 두고,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북한주민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
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
히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
당이 함께 통과시킨 이 법안은 북
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전
혀 도움이 안된다. 사실 이들은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
에는 조금도 관심 없다.

우선

지금 북한 식량난을 해결하려
면 매년 쌀 1백만 톤 이상을 지
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
부는 쌀이 군량미로 쓰일 수 있
다며 대북 쌀 지원을 중단하고
고작 옥수수 1만 톤을 지원하
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안은 인도
적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언
급하기는커녕 “전달과정의 투명
성”을 핑계로 사실상 인도적 지
원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그러면서 반공 · 반북 뉴라이
트 단체는 지원하겠다고 한다.
‘민간 북한인권단체 재정지원’은
북한인권을 앞세워 대북 강경책

을 주장하고 ‘퍼주기’ 지원을 규탄
하는 반공 · 반북 단체들이 받을
것이 뻔하다.

일찌감치 북한인권법을 제정
한 미국을 보면, 저들이 북한주민
을 위한다는 것은 완전히 위선임
을 알 수 있다.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
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 6년 동
안 탈북자를 1백여 명도 채 받아

들이지 않았다(민주당 송민순 의
원). 미국에 매년 난민 수만 명이
입국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히 적은 수다.

북한인권법에 탈북자의 미국
망명과 난민 신청 허용을 명시는
했지만 신원조사 규정이 워낙 까
다로워 그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
든다.

결국 이번 북한인권법안 또한

더 나은 삶은커녕 빈곤과 차별에 허덕이는 탈북자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운운
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걱정
하는 척하지만, 정작 국내에 정착
해 있는 탈북자들은 경제적 · 사
회적 냉대로 고통받고 있다.

정부는 탈북자 수가 급격히 늘
고, 그래서 남한 체제 우월성을 선
전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떨어
어지자 탈북자들을 짐짝 취급한다.

탈북자의 남한 입국 규모는
2009년 8월 현재 1만 7천 명에
이르며 해마다 2천~3천 명씩 그
숫자가 늘고 있다. 여성이 전체의
67 퍼센트를 차지하며 2004년부
터는 입국자 중 59 퍼센트 이상
이 가족 입국이다.

이런 탈북자 증가에 역대 정권
들은 지원금 액수를 대폭 줄이고
정착금 지원 기간이나 대상을 축
소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이것은
탈북자들의 경제적 처지를 더욱
악화시켰다.

<2009년 탈북주민 경제활동
실태 보고서>를 보면, 실업률은
한국 전체의 실업률보다 4배 이
상 높고 52.3 퍼센트가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로 생계비를 수급
하는 가구다.

<북한 이탈자들의 패널 연
구>(2009)를 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월평균 근로 소득은
정부 보조금을 포함해 54만 8천
원이다. 남한주민의 월평균 소득
의 25 퍼센트에 불과한 액수다.

짐짝

실제로 탈북자들 대부분은 일
용직 일자리와 잘해야 단기 계약
비정규직 일자리에 못 구하는
게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계속 고조
되는 남북 긴장은 탈북자들의 삶
을 더욱 팍팍하게 만든다.

이처럼 탈북자들은 경제적 궁핍

를 강화하려는 정권의 불순한 의
도가 사형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왔다.

괴물

한국에서도 단지 정치적 견해
때문에 국가보안법으로 사형당
한 사람이 전체 사형수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강호순 사건이 용
산 참사에 대한 대중적 분노를 덮
기 위해 이용됐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형수 대부분이 돈이나 복수
심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다. 살인
은 이런 누적된 소외와 억압의 결

괴로, 대부분 우발적으로 벌어진
다. 사형제가 살인을 예방하지 못
하는 까닭이다.

사형제는 비참한 삶을 사는 한
인간을 ‘괴물’로 만들면서 범죄의
진정한 근원을 가린다.

이를 통해 정권은 사회를 통제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불만을 범죄자에게 돌린
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사회
통제 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형제 위헌 판결을 바라야 한
다.

최미진 기자 lionlady43@left21.com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정책의
연장선이고 인권을 명분 삼은 대
북압박용일 뿐이다.

물론 북한 인권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안
은 도리어 북한 관료가 ‘내정 간섭’
에 맞선 ‘체제 유지’를 내세워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단속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미국이 벌인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 ‘인권’을 앞세운 제국주의적
개입은 그 나라 민중의 인권을 더
후퇴시키고 유린하는 결과만 낳
는다.

남한의 노동자 · 민중이 그랬듯,
북한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취
는 오로지 북한 노동자 · 민중이
북한 지배계급에 맞서 아래로부터
투쟁을 벌일 때 이를 수 있다.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

노동자 투쟁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하기

지난해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0조 야간 집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
정을 내렸다. 일몰 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
법 10조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결정은 2008년 촛불항쟁과
2009년 상반기 용산 참사항의 운동, 쌍용
차 노동자들의 투쟁 등이 낳은 성과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촛불집회 1심
사건 1백75건의 재판을 중단시켰고, 야
간 옥외집회 금지 법률로 재판을 받던
촛불집회 참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집시법 개정 TF’
를 구성해 반격을 준비했고, 지난 2월
16일 야간집회 · 시위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면 금지하는 ‘집
시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2월 17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야간 집회 제한
규탄 집회

야간에는 시민들이 문화제 같은 행사
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개악안
이다.

야간집회 전면 금지 개악안은 단지 촛
불집회 재발 방지 목적만 있는 것이 아
니다. 더 중요하게는, 경제 위기 책임전

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공격하려
는 사전 정치 작업이다.

경제 회복 전망이 매우 불안정하고,
세종시 문제로 집권당조차 공공연한 분
열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을 무력화시켜야만 한다.

그래서 이명박은 교사 · 공무원의 정
치 활동 자유를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
동당 탄압과 MBC 장악 시도도 마찬가
지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야간집
회 전면 금지 개악안을 추가한 것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야간집회 전면 금
지 개악안에 맞서 시민 · 사회단체와 함
께 민주노총도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최영준



세종시 쟁투가 이명박의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나라당이 세종시 당론 결정을 위한 의원총회를 2월 말까지 계속하기로 했지만, 친이계와 친박계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절충안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양측의 핵심 세력은 모두 절충안에 관심이 없다. 세종시 수정 문제는 상대방에게 어떻게 타격을 줄 것인가로 이미 발전해 버렸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세종시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당론을 변경하고 4월 국회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 당론이 변경되더라도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겠다고 친박계는 이미 공언했기 때문에, 친이계가 실제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친이계 일부는 지방선거와 함께 세종시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한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반이명박 세력이 총결집할 기회를 일부러 만들어 주는 어리석은 짓을 할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친이계의 세종시 당론 변경과 수정안 국회 상정 추진은 ‘출구 전략’의 시작이라고 보는 게 옳을 듯하다. 후퇴를 결정했더라도 적에게 최대한 타격을 입히는 게 상책이기 때문이다.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친박계가 결국 이 당론을 어기



가까이 하기엔 너무 멀어지고 있는 이명박과 박근혜

도록 만들어 박근혜에게 주류 지배계급의 배신자라는 낙인을 찍으려 한다. 한나라당 의원 이한구의 지적처럼 세종시 수정안 당론 채택이 뜻하는 바는 “박근혜 전 대표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레이덕

이는 앞으로 입 다물고 있거나 제 발로 나가거나 양자택일을 하라고 친박계에게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 박근

혜가 이명박과 회담을 거부한 사실을 청와대가 공표한 것도 분열의 책임을 박근혜에게 덮어씌우기 위해서다.

한편, 친박계도 친이계에게 분열의 책임을 씌우기 위해 달려들고 있다. “여왕벌 밑에 벌 떼들이 호위하고 있는 것 같다”거나 “어떤 X 종으라고 이혼을 하느냐. 분당도 마찬가지...”라고 몇몇 친이계 의원들이 박근혜를 비난한 것을 문제 삼으며 반격하고 있다.

또, “마치 무슨 흠이 있는 듯 위협을 한

다”며 청와대와 이재오가 수정안을 지지하지 않는 의원들을 뒤통사하고 위협하는 ‘정치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수정안이 채택돼도 정치 공작 때문이라는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종시 원안 고수라는 ‘벼랑 끝 전술’을 썼다면, 이명박도 이제 ‘현 정권을 벌써 레이덕에 빠뜨릴 것인가’ 하고 보수 세력을 압박하는 ‘벼랑 끝 전술’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서 물러서면 주도권과 권력 상실

을 뜻하기에 퇴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투쟁은 얼마든지 극단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분당조차 이 점에 해당하는 투쟁 과정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

이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든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이고 이명박 정부의 힘은 약해질 것이다. 진보진영은 이 기회를 경제 위기 책임전가에 맞서는 투쟁을 고무하고 조직하는 데 이용해야 한다.

강동훈 기자 kah@left21.com

청소년 ‘알몸 뒤돌이’ 논란

청소년이 이명박의 새로운 속죄양이 되고 있다

한 중학교 학생들이 졸업한 고교생 선배들의 명령으로 강제로 옷을 벗고 뒤돌이를 하는 사진이 퍼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한겨울에 벌거벗겨져 수치스런 주문에 웅한 학생들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아연실색했다.

일부 보수언론은 “비행학생들을 방치하면 더 많은 선량한 학생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탈 행위를 저지른 학생들은 갑자기 땅에서 솟아난 괴물이 아니다. 괴물 같은 극소수가 순진한 또래들을 물들게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사회가 청소년들을 병들게 한다.

좋은 대학만 바라봐라 이겨라 짓밟아라를 강요하는 사회가 청소년들에게 말로만 우정과 배려를 말해서 될 일이 아니다. 통제와 억압 속에서 학창 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때리지 말라, 사고치지 말라 다그쳐 봤자 억눌린 마음을 풀어 주진 못할 것이다.

이명박은 이런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며 달마다 교육대책회의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명박이 직접 챙기겠다며 열거한 교육현안은 ‘대입제도 선진화, 학교 다양화’ 등 입시 경쟁을 강화해 청소년들을 더욱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정책들이다.

또, 이명박은 “교사도 책임이 있다”며 “제도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처럼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핑계 삼아 사회적 억압과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우파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영국의 대처 정부도 청소년의 일탈 행위를 빌미로 교원노조와 진보진영 공격에 나선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경쟁 교육에 삶을 저당잡힌 청소년들이 ‘뒤틀린 해방감’을 맛보려 하지 않게 하려면 병든 사회를 바꿔야 한다.

여승주 기자 estraven@left21.com

토탈에 맞서 싸우는 프랑스 정유소 노동자들

프랑스 정유소 노동자 중 거의 절반 이상이 파업에 들어갔다.

6주 전에 뵁케르크 근처에 있는 토탈의 플랑드르 정유소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시작했다.

이번 주 화요일(2월 23일)부터 투쟁이 엑스모빌 정유소들로 번졌다.

프랑스의 정유 과정 중 거의 70퍼센트가 파업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노동자들은 플랑드르 정유시설의 작동을 한동안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 싸우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 결정이 앞으로 있을 정유소 폐쇄의 전초전이 될 거라 생각한다.

지난주 토탈 노동자들은 플랑드르 정유소의 관리 사무실을 점거했다. 월요일에 그들은 정유소를 폐쇄하더라도 노동자들이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는 토탈 경영진의 제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토탈의 플랑드르 정유소 파업 노동자들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정유소 여섯 곳과 연료 저장소 일곱 곳에서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나머지 세 곳의 정유소 노동자들도 주중에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경영

진은 정유량을 줄이고 공장을 돌리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 협상자들은 충분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김용욱 기자

▶ 1면에서 이어짐

하지만 조합원들은 위기 의식을 느끼는 만큼 투쟁 열의도 높다. 이미 방문진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신임 보도본부장과 제작본부장 출신 저지 투쟁을 2주일 넘게 하고 있고, 파업 찬반투표에도 거의 모든 조합원이 참가해 매우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김훈 조합원은 “MBC가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한다”며 “당연히 파업을 해야 한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MBC 노조는 ‘낙하산 사장’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할 계획이다.

이근형 위원장은 “언론이 살아나도록, 민주주의가 다시 꽃 피도록 ... 피 흘려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히고 “이 땅의 민주주의가 살아날 수 있게 국민 여러분도 함께 MBC를 에워싸 달라”고 호소했다.

언론노조와 언론노조 KBS본부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MBC 투쟁에 적극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MBC 노동자들은 이미 1988년과 1996년에 각각 사장 퇴진과 연임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고 승리한 바 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만 언론악법 저지를 위해 세 차례 파업을 벌인 저력이 있다.

파업은 다른 언론노동자뿐 아니라 시민들이 연대하는 구심이 돼, 이명박의 방송 장악에 반대하는 여론을 환기할 것이다.

MBC 노동자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그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다함께의 이론지

마르크스21

4호 (2009년 겨울호)

특집: 최근의 경제 위기와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현 위기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_ 조셉 추나라

이윤율과 오늘날의 세계 _ 크리스 하먼

쟁점 진보진영의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_ 김하영

오바마 시대 북미 관계는 어디로? _ 정병호

쌍용차 대안과 공기업화 논쟁 _ 정종남

경제 위기 시기 복지국가 전략의 의미와 한계 _ 장호중

다윈과 진화론 _ 알렉스 캘리니코스

현대 진보사상 조류

트로츠키 전기 작가

아이작 도이처 _ 닐 데이버슨

일반 이론 심층 탐구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형태 _ 알렉스 캘리니코스

역사에서 배우기

서방 공산당의 궤적 _ 크리스 뎀버리

구독 신청 문의

Tel 02-2271-2395 / Fax 02-2271-2396

가격 15,000원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녹두(동국대후문)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한책방(역촌)

동방책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서울의 주요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6번 출구 1백 미터 파리크라상 앞

신촌역 3번 출구 버거킹 앞

홍대입구역 4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명동 명동 예술극장 앞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쌍용차 투사들이 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 노동자들에게

점거파업의 교훈을 전한다

보수 언론들은 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 투쟁을 두고 “제 2의 쌍용차 사태”를 우려하기 시작했다. 대량해고에 맞선 노동자 투쟁이 강력한 점거 파업으로 이어질까 봐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파업은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에게 모순적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영웅적 투쟁은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겼지만, 일종의 ‘패배의 기억’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래서 대량해고에 맞서 투쟁에 나선 한진중공업·금호타이어 노동자들 사이에선 ‘쌍용차처럼 격렬하게 싸우면 고립된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77일 간 파업을 벌인 쌍용차 투사들은 이것이 오해라고 말한다.

파업 직후 구속됐다가 지난 2월 12일 석방된 고동민 조합원은 보수 언론들이 쌍용차 파업을 거론하는 이유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부와 언론들은 쌍용차처럼 싸우면 노조를 다 말살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그들이 [점거 파업을]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우니까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난 1월 석방된 양형근 조합원은 “강력히 싸워서 고립된 것이 아니었다”면서 “점거 파업이 오히려 연대의 조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동민 조합원은 연대에 나선 수많은 단체들, 노동자들, 촛불 네티즌들, 학생들을 떠올렸다.

“해고되고 구속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고통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한 동지들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거 파업만큼 노동자들에게 단결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도 했다.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동지애가 생기고 투지가 커졌습니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였던 것입니다.”

양형근 조합원은 한진중공업에서도 공장 점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점거 파업을 통해 하나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생겼어요. 서로 격려하고 어깨 두들겨 주면서 갈 수 있었죠.”

노동자의 학교

쌍용차 파업이 고전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쌍용차 투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연대 부족을 지적했다. 박근혜 전 쌍용차 지부장 직무대행은 특히 이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쌍용차 파업은 총자본과 정권에 맞선 투쟁의 대리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전면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고 책임지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힘이 발동되지 못해 고립된 것입니다.”

쌍용차 파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지도부는 ‘계급 대리전’

성격에 걸맞는 광범한 노동자 연대를 조직하지 못했다.

고동민 조합원도 연대 투쟁 건설보다 양보 압박에 힘을 쏟은 금속노조 지도부를 비판했다.

“금속 지도부가 양보론을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싫었어요. 98년 현대차 파업에서도 양보에 매달려선 안 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이 패착의 원인인 듯합니다. 처음에는 설마 2천6백46명을 전부 자르겠나 싶었는데, 자본은 정말로 모두 해고했습니다.”

양형근 조합원도 ‘선제적 양보론’을 비판했다.

“우리가 늦게 양보안을 내서 문제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양보는] 소용 없는 일이에요. 얻는 것은 없이 현장만 혼란스러워지고 자신감만 다웁니다. 게다가 한 번 양보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진중공업 노조가 [사측이 요구하는] 무급휴직을 받아들여도 그걸로 끝이 아닐 겁니다.”

그는 힘이 있을 때 단호하게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쌍용차 싸움을 두고 사람들이 패배의식을 가질까 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흔었습니다. 투쟁이 정당하다면 싸움을 주저해선 안 됩니다. 해고자 명단이 발표되기 전에, 힘이 있을 때 강력히 싸워야 합니다.”

박설 기자 snow@left21.com



지난해 쌍용차 점거파업 “조합원들이 개별적으로 있으면 나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점거 파업을 통해 하나로 뭉쳐 있었기 때문에 힘이 생겼어요.”

사진: 양수현 기자

무더기 보복 징계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

철도공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징계로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다. 철도공사장 허준영은 ‘불법 파업에 본패를 보여 주겠다’며 지난해 파업 참가자 1만 3천여 명 전원을 징계하겠다고 나섰다.

이미 1백90여 명이 파면·해임됐고, 하루 평균 4백여 명이 징계처분을 받고 있다. 징계위원회는 진술을 중단시키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가로막은 채 의사봉만 두드리는 ‘불법과 무원칙’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한 조합원은 “이렇게 무차별적인 탄압은 처음”이라며 분노에 치를 떨었다. “조합원의 절반 정도를 징계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징계 사유는 정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하다 못해 신혼여행중이어서 파업에 참가하지 못한 동료에게도 징계가 떨어졌어요.

“심장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있던 간부까지 해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탄압 때문에 조합원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보수 언론들은 “법과 원칙” 운운하며 “오랜만에 불법파업에 책임을 묻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흐뭇해 한다. <조선일보>는 허준영을 두둔하며 “한 번 내린 결정은 뒤집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징계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요금 인상, 공공서비스 후퇴, 대량 감원에 맞선 지난해 파업은 완전히 정당하다.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되자마자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노동자들을 응원한 것도 이 때문이다.

허준영 퇴진

철도노조 박상규 조합원은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 정부와 사측을 비판했다.

“철도파업이 왜 불법입니까. 이명박의 한 마디 말에 합법파업이 불법이 됐어요. 노조의 공공성 요구를 무시하는 이명박과 허준영은 우리를 징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선 네티즌과 철도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허준영 퇴진 서명’까지 이어지고 있다.

배영대 조합원은 공사측의 일상적 노동통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준영 공사장은 일방통행식입니다. 머리를 길게 내려도 징계하겠다고 하고, 사가까지 만들어 그걸 못 외우면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철도노조 파업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낙하산 사장들이 많았지만, 이렇게까지 통제와 탄압에 열을 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런 탄압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덕표 조합원은 이렇게 말했다.

“정부와 공사는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 노조 길들이기에 나섰다. 정부의 최대 목표 중 하나가 노동시장 유연화 아닙니까. 이를 위해 노동자들이 반발하거나 저항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철도노조는 최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투쟁 계획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노조는 3차 파업을 경고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노동자들도 철도공사측의 탄압이 오히려 투쟁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한다. 박상규 조합원은 “징계를 통해 철도 노동자들의 기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모두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준영은 노조를 때려잡으려고 철도에 왔지만, 징계로 우리의 기까지 때려잡을 수는 없습니다.”

홍덕표 조합원은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5월 23일이면 단협이 해지됩니다.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말경부터는 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노사관계 선진화’의 원년을 꿈꾸며, 철도공사를 핵심 관리 사업장 중 하나로 꼽았다.

따라서 우리도 탄압의 한 가운데서 투쟁을 준비하는 철도 노동자들을 지지하고 방어해야 한다.

박설 기자 snow@left21.com

이주노동자들의 연이은 금속노조 가입을 환영하며

이정원 이주노조 교육선전부장

2007년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에서 최초로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고 유니온샴을 쟁취한 이래 금속노조 안에서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인 노조가 세 곳으로 늘어났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삼우정밀지회’의 뒤를 이어 2009년 1월 경남 마창지역 금속지회 보그워너씨에스 현장위원회가 이주노동자 고용을 지키기 위해 파업까지 벌여 이주노동자 조합원 조직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12월 금속노조 경주지부 영진기업지회가 베트남과 버마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했다.

이제 금속노조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버마 노동자들이 조합원인 다국적

노조가 됐고 금속노조 대의원 중에는 인도네시아 노동자도 있다.

이 세 곳의 노조는 모두 공통적으로 고용된 이주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명시한 단협을 체결했다. 이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이노조들은 모두 사측과 강경하게 맞서 싸워야 했다. 또 내국인 조합원들을 설득하며 많은 토론을 했고, 동시에 이주노동자들에게 끈기있게 노조를 설명하고 함께하자고 호소했다.

아름다운 연대

이주노동자들은 언제라도 해고될 수 있고 특히 3년 체류 기한 만료 시점에서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면 순전히 기업주에 기대야 하기 때문에 늘 맘을 졸여 왔다. 그러나 이젠 노조 덕분에 어깨를 펴고 부당한 처

우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이주노동자를 노조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주노동자들에게만 이로운 일이 아니었다. 이 세 곳은 모두 최근 노조가 만들어진 신생 노조들로 사측의 노조 탄압에 맞서며 노동자들의 조건과 권리를 지키고 더 나은 요구를 쟁취하는 데 이주노동자 조직화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산별노조 등 상급 조직이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도 매우 중요했다. 수년 전부터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에게 노조의 문을 개방했다.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 노조 가입을 위해 규약을 정비했고 금속작업장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도록 산별 교섭을 맺어 왔다.

나이가 금속노조는 계급적 연대를 위해 이주노동자 조직화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해 ‘1사 1조직’ 사업에 이주노동자도 포함되도록 올해 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런 흐름은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한 전진이다. 민주노조 운동이 이주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노동자들의 투쟁 속에서 계속 변해 왔다. 1990년대 중반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은 노동 운동가들로 하여금 이주노동자 문제를 돌아보게 했다.

특히 2003~2004년 이주노동자들의 ‘명동성당 농성 투쟁’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이주노동자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줬다. 이것이 지금 금속노조, 건설노조, 일반노조 등에서 이주노동자를 위해 투쟁하고 또 이들을 조합원으로 조직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이런 흐름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심하고 그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와 사장들의 공격이 일반화되는 상황에서는 이주노동자와의 연대는 현실적 압력에 밀려 추상적 공문구가 되기 쉽다.

그래서 이런 압력 때문에 이주노동자 고용을 반대하는 단체 협약을 체결하거나 같은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적대시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앞서 언급한 노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게 됐다.

더 많은 노조들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같은 노동자로서 노조에 가입한 것을 환영한다”는 아름다운 연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자.

민주노동당이 국가 탄압에 완강히 저항하다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수백만 원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들의 명단이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 2월 9일 한나라당 의원 이군현 후원 명단이 드러난 데 이어 박찬숙·전여옥·권철현·김학송 등 한나라당 전현직 의원들을 후원한 현직 교장·교감 명단이 추가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하고, 법무장관 이규남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판단하겠다고 한다. 서술 퍼렇던 검찰과 경찰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당원 명부와 투표 기록을 모두 내놓으라 하고, 금융결제원에 등록된 CMS 계좌를 불법 돈세탁 계좌라며 당사 난입 협박까지 한 그들이다.

검찰과 경찰의 이중 잣대는 공무원·전교조·민주노동당 탄압이 정당성이 없다는 방증이다.

2월 17일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민주노동당 서버 침탈과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토론회에서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공무원법의 정치 중립성은 의무가 아니라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불법적 법치”를 비판했다.

경찰은 두 차례 영장 집행으로 공무원과 교사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 영장 집행 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장여경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1·2차 영장 집행 수단으로 집착되는] 온라인 수색은 전 국민 주민번호를 보유한 경찰이 단 말기 하나 놓고 전 국민의 신상 정보를 뒤지는 것”이라며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를 지적했다.



2월 2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

사진 이미진 기자

2월 20일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에서 만난 공무원노조 이창화 조합원은 탄압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교사·공무원은] 자기를 손발이 돼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이 ‘안 돼’하고 말하는 건 [이명박 정부에게] 치명타인 거죠.”

두려움

전대곤 씨(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 탄압은 통합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들어감으로 해서 민주노총으로 힘을

모으는 걸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라고 봤다.

전교조 교사이기도 한 김행수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정책국장은 “이번 탄압은 단지 민주노동당만이 아니라 이명박을 비판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세력에 대한 조직적, 정치적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과 전교조·공무원노조를 속죄양 삼아 진보진영을 위축시키고 집권당 내부 분열 등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이명박의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이명박의 비열한 탄압은 민주노동당이 열흘 넘게 당사 농성으로 맞서 싸우자 잠시 주춤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탄압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저항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경찰은민주노동당사 앞 촛불집회가 “불법”이라며 민주노동당 최고위원들에게 출석요구를 발부했다.

진보진영 전체가 대중적 항의를 벌여 이명박의 진보진영 탄압에 맞서야 한다.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김성보 전교조 조합원/서울 경수중 교사

학교에는 성인이 된 제자들이 교마음을 표시하며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선배 교사들이 있다. 선생님 덕분에 변화나 성장의 계기를 찾았고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그런데 제자와 헤어지고 나면 종종 교사들은 ‘사실 그 제자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는 아니었다’는 멧찍은 고백을 한다. 자신에겐 사소한 말이나 행동이었을 뿐인데, 당시 학생에겐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말과 행동은 늘 조심스럽다(조심스러워야 한다). 권력과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보편적인 원칙을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한편으로 보수적이고 한편으로 진보적이다. 그렇게 중립이다. 자신이 기준이다. 보수적으로 지켜야 할 것과 진보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은 교육계 내의 논쟁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스스로 변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의 보수성이나 진보성을 ‘처벌’함으로써 조종하려는 자들이 있다면, 그 자들이야말로 오만하며 정치적으로 불순하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 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은 정치의 핵심 이슈가 된 지 오래다.

‘교육 대통령’을 자임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를 본 적이 거의 없다. 국회의



교사들이 시국선언을 하고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다.

사진 김민준 기자

원, 시의원 등 정치인들은 졸업식 상상을 핑계로라도 지역 학교와 교육에 관심 있는 척해야 한다. 사교육비는 줄이고, 교육 예산은 늘려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말은 거짓 공약이라도 해야 한다. 최근에는 ‘교육 개혁’도 정치인들의 단골 메뉴다.

교육은 정치적이다. 그러나 교사들과 그들의 교육활동이 정치의 영향을 받고,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이를 처벌하겠다고 나섰다. 불순하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교육 활동은 놔 둔 채로, 전교조만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교총이 중심

이 된 시국선언은 문제가 없고,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갑자기 불법이라고 한다.

더구나 명단까지 공개된 시국선언인 데도 조사를 핑계로 전교조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컴퓨터와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 수색하더니, 일부 판사가 시국선언을 무죄 판결하자, 민주노동당을 지지·후원한 흔적이 있다며 별건 수사로 처벌을 시도하고 있다.

유치원연합회가 한나라당 입당 원서를 돌리고, 교장 등이 한나라당 정치인들에게 교액의 후원금을 입금한 것은 문제 삼지도 않는다.

불순

고복격약(鼓腹擊壤)이라는 고사성

어가 있다. 정치가 바르게 되면 국민들이 배를 두드리고 땅을 구르며 ‘정치 따윈 신경 안 쓴다’고 노래한다는 내용이다.

교사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며 시국선언을 하거나, 급식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정당을 반대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이명박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처벌할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학생 지도에 매진하며 고복격약하지 않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에 오히려 죄책감을 가져야 한다.

일제고사와 자사고 확대는 학생들의 경쟁을 강화시켜 사교육비가 폭등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학교자율화는 이름만 번지르르할 뿐 교육 관료와 학교장의 제왕적 권력을 강화하며 민주주의의 후퇴를 낳았다.

특정 교육 정책이 해악적이라고 예측되거나 심지어 해악이 눈에 보이는 데도 눈과 입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

교사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틀어막고 정치 권력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중립 보장은 아닐 것이다.

교육 정책이 특정 정치 세력의 입맛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정치 권력을 비판하고 분석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민주시민의 권한을 교사에게도 제한 없이 부여하는 것이다.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

반MB연합은 노동자 정당들의 양보를 강요한다

이명박은 지난 2년간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복지 예산은 삭감하고, 실업자는 늘었으며,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야당들이 올 지방선거에서 연합 후보를 내지못지 못한 집권당을 심판하자는 말은 그래서 솔깃하게 들릴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은 2월 16일에 ‘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야 5당 협상회의’(야 5당 협상회의)를 출범시켰다. 울산과 경남에서도 야당들은 광역 차원의 후보 단일화에 공식 합의했다.

그런데 한국판 ‘인민전선’이라 할 수 있는 ‘야 5당 협상회의’ 출범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진보정당들이 요구한 한미FTA·해의 파병 반대와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를 빼려 했다. 연합 성사를 위해선 ‘합의 가능한’ 의제만을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요 광역단체장과 의원 후보도 독식할 기세다. 광주와 전북에선 민주당이 독식한 광역의회가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모두 2인 선거구로 바꿔 버렸다. 광주에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경찰력을 투입했다.

정체성 훼손과 정책 후퇴

민주당 편을 들던 ‘희망과 대안’조차 “이런 민주당 지도부를 어떻게 믿고 연합을 추진하나”고 불만을 터뜨릴 정도다.

사실, 민주대연합의 국제적·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민주당 같은 자본가 야당은 언제나 그 연합 안에서 특권적 지위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자본가 계급의 요구를 노동계급에게 강요하는 통로로서 연합을 활용했다.

그래서 민주대연합은 노동계급의 요구보다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온건한 개혁 요구에 한정하거나, 노동계급의 투쟁이 분출할 때 그 투쟁을 자제시키는 구실을 했다.

이것은 연합에 참여한 정당들의 계급적 기반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노동계급의 진보정당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은 자유주의적 기업가 정당이다.

야당이 된 뒤에도 민주당은 노동계급의 개혁 요구를 온전히 지지한 적이 거의 없다. 민주당은 현 비정규직 악법을 지지하고 한나라당의 노조법 개악을 사실상 방기했다. 해고 금지나 고용보장을 위한 부도기업 공기업화 같은 정책은 지지할 리 만무하다.

일부에선 야당 선거연합을 위해 ‘민주당의 [후보] 양보가 열쇠’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야당 선거연합 성사의 진정한 열쇠는 사실 진보정당이 얼마나 양보할 것인가다. 그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이미 몇차례 깨질 뻔도 했”던 협상 테이블의 “구심축 노릇을 하는 것”(〈진보정치〉459호, 데스크칼럼)은 민주노동당이 양보할 태세가 돼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야당 연합에 집착할수록 진보정당들은 정치적 정체성 훼손과 정책 후퇴를 감수해야 한다. ‘희망자치 만들기 경남연대’ 발족식에서 민주노동당 이병하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만큼은 정체성이 일부 상처를 입더라도 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 노화찬 대표는 국민참여당 대표 이재정에게 “[국민참여당 창당대회에 가 보니] 한 동네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다”고 차이를 흐렸다.

이명박 심판이 필요한 이유는 이명박의 친재벌·반민주 정책이 노동계급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국민참여당과 연합하려고 진보정당이 스스로 정체성 훼손을 감수하다 보면, 진짜로 이명박을 물러서게 할 노동자들의 대중행동을 건설하며 진보 대안을 제시할 기회만 잃어버릴 것이다.

별써 야당 연합에 치중하다 진보대연합 논의는 사라졌다.

김문성 기자 enlucha@left21.com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에 분노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 빗 속에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잘사는 사람은 아주 소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줄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입학식 날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에 참가한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신입생의 발언이다.

올해 4년제 사립대학 60여 곳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은 지난해보다 37퍼센트나 줄었다.

입학금도 올라 고려대, 동국대, 한국외대 등은 입학금만 1백만 원이 넘고 입학할 때 총 5백만 원가량을 내야 한다. 동국대 대학원이 등록금을 14퍼센트 인상하는 등 대학원 등록금도 올랐다.

경제 위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노동자·서민 가계에 더욱 큰 부담이다. 지난해 3분기 전국 가구의 월평균 실질소득은 3.3퍼센트, 임시·일용직 노동자 임금은 7.2퍼센트 하락했다(통계청).

“학교가 발전하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가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논리다. 그러나 대학이 기업처럼 돈벌이에 혈안이 될수록 교육의 질은 나빠지고 학생들의 고통도 커졌다.

한양대 유예송 총학생회장은 “학교 당국은 ‘학교가 발전하려면 연고대처럼 등록금이 높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재단은 전입금 법정 비율도 지키지 않았다. 적립금은 8백억 원 넘게 쌓아 두면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등록금을 2.8퍼센트 인상한 학교를 비판했다.

등록금이 4.9퍼센트 오른 성신여대의 정진경 총학생회장도 “올해 등록금 인상분이 30억 원 인데 학교는 60억 원을 적립했다. 학교가 적립만 안 했으면 충분히 인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들끓는

등록금 인상에 항의해 여러 대학 학생회가 투쟁하고 있다. 학생들의 지지도 높다.

얼마 전 송실대 총학생회장과 단과대 학생회장들은 ‘새내기들이 등록금 동결시키지 못해 미안’, ‘등록금을 올려라’라는 펼침막을 들고 입학식을 진행하던 장충체육관 무대 앞에 섰다.

입학식이 어수선해지는 돌발 상황이었지만



1월 29일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며 본관을 점거한 한국외대 학생들

많은 학생들은 지지를 보냈다. “학생회장단이 시위를 마친 후 퇴장할 때, 갑자기 체육관 곳곳에서 환호와 큰 박수가 나왔다.”

송실대 총학생회 배우진 집행위원장은 등록금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소개해 줬다.

“총학생회 이메일로 응원 메일이 50여 통이나 들어왔다.”

“포털 사이트에서 입학식 시위 기사를 본 수학과 08학번 학생이 ‘베플(베스트 리플)이 되면 1인시위 하겠습니다’ 하고 리플을 달았고 이 학생은 3월 2일 개강날 1인시위를 하기로 했다.”

성신여대 정진경 총학생회장은 “등록금 인상 때문에 학생들 커뮤니티가 들끓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비판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리플도 50~1백여 개씩 달린다. ‘우리가 먼저 싸우겠다’는 학생들도 있다”고 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총학생회는 ‘등록금 납부연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

회는 이미 방학중에 학생 1백여 명이 참가해 본관 점거투쟁을 했고 개강 후 투쟁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성신여대, 송실대, 성신여대, 한양대 총학생회는 3월 말~4월 초에 학생총회를 열 계획이다.

대학에게서 양보를 얻어 내려면 학생들의 행동을 확대해 대중적 점거 같이 학교를 직접 압박하는 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부추기고 대학들도 등록금 인상을 담합하는 만큼 여러 학교 학생들의 연대 투쟁도 더 확대해야 한다.

최근 교육의 상품화, 대학의 기업화가 가속화하면서 등록금 인상뿐 아니라 서울대 법인화, 중앙대 구조조정 등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적 권리 탄압도 벌어진다.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시도에 맞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투쟁이 연결될 필요도 있다.

정선영 기자 susumul@left21.com

전 한총련 의장 송효원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2월 26일 2005년 한총련 의장이자 홍익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던 송효원 씨의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은 송효원 씨(사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 경찰은 체포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송 씨의 옷이 찢어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연행했다.

송 씨는 한총련 활동 때문에 4년 가까이 수배 생활을 하며 고통을 당했다. 경찰은 ‘친북·이적’의 굴레를 덧씌워 마녀사냥을 하지만, 송 씨를 비롯한 한총련 활동가들은 어떠한 죄도 없다.

등록금 인상·청년 실업 등에 맞서 대학생들의 권익을 위해 싸우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함께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활동을 한 것이 도대체 왜 죄인가.

국가보안법은 이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사상 탄압법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저항을 미리 단속하기 위해 이런 속죄양을 계속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6년 만에 가장 많은 ‘안보위해사범’을 체포했다.

경찰은 송효원 씨 체포 후에도 범민련 활동가 기소, 사회주의노동자신문 활동가 체포, 한신대 총학생회 활동가 체포, ‘615시대 대구청년회’ 활동가 자택 압수수색 등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을 계속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통일 교사’ 김형근 씨가 최근 무죄 판결을 받았듯이 송효원 씨 역시 무죄다. 송효원 씨는 지금 당장 무죄 석방돼야 한다.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도 폐지돼야 한다.

박건희 기자 pkh@left21.com

3월 신입생 맞이 강연회

위기의 시대

대학생, 대안을 꿈꾸다

날짜: 2010년 3월 13일(토), 14일(일)
장소: 고려대학교 서관(문과대) 132호
문의: 010 - 5678 - 8630 / student@altogether.or.kr
클럽: club.cyworld.com/studream
참가비: 하루 6,000원, 전일 10,000원
입금계좌: 하나은행 289-910002-67105(백은진)
주최: 대학생다함께

3월 13일(토)

1:00 ~ 1:10

환영사

조나은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1:10 ~ 2:40

이명박 시대 — 대학생의 삶과 저항

김지운 (‘고대녀’로 알려진 고려대학교 학생)

3:00 ~ 4:30

오늘날에도 왜 여성 차별은 계속되나?

최미진 (레프트21) 기자)

4:50 ~ 6:30

오늘날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걸까?

이정구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3월 14일(일)

1:00 ~ 2:30

경제 회복을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하나?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그래도 희망은 노동 운동> 저자)

2:50 ~ 4:20

아프가니스탄 점령 9년 — 오바마는 왜 부시의 전쟁을 지속할까?

김덕엽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4:40 ~ 6:10

기후변화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장호중 (기후정의 활동가, (레프트21) 기자)

6:10 ~ 6:30

갈무리 (영상 상영)

중앙대 구조조정 추진

경쟁은 늘리고 민주주의는 옥죄고

“이사장님은 산타클로스가 아니에요. 대규모 투자하려면 자기 성질에 맞게 일단 해 봐야 할 거 아닙니까.”

2월 18일 중앙대 교수협의회가 대학 구조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부총장 안국신은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이사장님’의 계획은, 우선 10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대폭 통폐합해 18개 단과대 40~41개 학과로 만들고 국내 최대 규모 경영학부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학문과 예술계열에는 불리한, 취업률 같은 잣대로 학과 평가를 한 결과다. 또, 계열별 부총장을 임명해 상당한 권한을 주고 다섯 계열 간 자율경쟁을 유도해 차등 지원을 하려 한다.

학교 당국은 계열별 교수 대표들로 구성된 ‘계열위원회’와 ‘심도 있게 논의’해 2월 24일 교수 전체회의에서 통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해 왔다. 그러나, 학교 당국의 구조조정이 시장지향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비판해 온 한 교수는 24일 합의에 이른 부분이 거의 없다고 전했다.

상명하달

구조조정 방침은 지난 18일 토론회에서도 강한 비판을 받았다.

교수협의회 측 토론회자로 나선 영문학과 고부

영 교수는 “많은 교수들이 기업 총수인 이사장이 학문과 교육의 전당인 중앙대학교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인 두산그룹의 계열사나 하청업체로 변모시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직원노조 노상철 위원장은 “직원들은 이미 구조조정의 맛을 보고 있다”고 했다. 두산 재단이 들어온 뒤 직원 80여 명이 명예퇴직을 한 것이다. 두산이 쓰는 인사사고 제도를 모든 직원들한테 적용해 S급부터 C급까지 평가하고 급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부 행정부서 아웃소싱 계획도 있다고 했다.

임지혜 총학생회장도 ‘돈 되는 학문’만 육성하는 구조조정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학생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총장은 토론회에서 강한 항의에 부딪히자 “구조조정이란 게 어차피 민주적 합의가 불가능하다 … 결국은 톱다운(상명하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솔직한 마음을 드러냈다.

이미 학교 당국은 재단과 총장을 비판한 교지를 전방 회수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비판 언론의 입을 막으려 한 바 있다. 지원금을 끊겠다고 위협해 결국 총학생회 주관 새터(새내기새로 배움터, 신입생수련회)도 무산시켰다. 자연대학생회가 학교가 정한 일정을 거부하고 새터를 가

자 학생회장과 소속 과학생회장들에게까지 징계 위협을 했다.

중앙대 당국은 3월 말에는 무조건 구조조정을 확정해 5월 교과부 심의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할 방침이다. 설명회 등을 해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지만 그동안의 태도로 봤을 때, 일방적 홍보에만 열중할 가능성이 크다.

18일 토론회를 시작할 때 강내희 교수가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중앙대를 주목하고 있다. 냉혹한 기업식 수술이 순항하지 못하길 바라면서 말이다. 토론회를 마치며 강 교수는 교수, 노조, 학생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드는 게 어떤지 물었다.

임지혜 총학생회장은 공동 대응에는 이미 다들 교감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개강만 기다리고 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 운동을 하겠다고 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기업식이라면 며칠 만에 다 끝낼 일”이라고 불평한다는 이사장 박용성이 물려서게 하려면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

기초학문 지원 축소, 경쟁 강화, 노동조건 위협 등 기업식 구조조정으로 많은 제약을 받게 될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공동 투쟁이 정말로 중요하다.

여승주 기자 estraven@left21.com

Letter@left21.com

독자토론광장 | 3월 8일(월)까지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 지인과 나눈 대화, 운동의 발전을 위한 자신의 생각 등 어떤 것이든 보내 주세요. 책임 있는 토론을 위해 국가보안법 등 국가 탄압이나 사용자 탄압, 소수자 차별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되도록 실명으로 기고해 주길 바랍니다.

새터 주관을 가로챈 국민대학교 당국

국민대학교 당국은 지난해까지 학생회가 주관해 온 새터(새내기새로배움터, 신입생수련회)를 올해는 학교가 주관하겠다고 통보했다. 학생처가 정한 곳으로 새터를 가지 않고 학생들이 따로 가면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이런 일은 국민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다. 중앙대, 서강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공주대 등에서도 학교 당국이 새터에 관여하거나 방해를 시도했다.

많은 학교들이 학생회가 등록금 인상이나 학교의 적립금 누적을 폭로·규탄하고 재단을 비판하는 것을

막으려고 ‘저항의 씨’이 될 만한 것을 자르려 한다. 국민대도 2008년부터 ‘게시물 승인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했고, 지난해에는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가 학교 곳곳에 건 등록금 인하 요구 팸집막을 철거했다.

학교 당국은 새터에 참가하는 재학생 인원 제한까지 뒀다. 그러나 원래 새터는 신입생과 재학생이 함께 어울리면서 대학생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지난해까지는 선배들이 후발대로 참가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는데 이를 금지하는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보통 2박3일이던 새터 일정도 하루 줄여 재학생들이 진행해 온 프로그램이 상당부분 축소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학생회들이 초반에 학교 당국의 ‘협박성’ 제의에 항의하지 않고 이를 수락한 점은 유감스럽다. 안전 문제를 내세우는 학교 측 논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학생들의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훼손할 우려는 없는지 따져 보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일은 앞으로도 학교 당국이 학생회 활동에 관여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아혜 국민대학교 학생

남·북한 인권 억압의 유사성을 지적한 것이 오류인가

주연수 씨의 <레프트21> 25호 독자편지에서 이현주 기자가 남·북한 인권의 차이를 간과했고, 이것이 오류라고 비판했다.

주연수 씨의 지적에는 공감할 만한 측면이 있다. 분명, 남한과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는 시민적 권리는 다르다. 예컨대, 북한에는 민주노동 같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노동조합이 없고, <레프트21> 같은 신문을 읽다간 쥐도 새도 모르게 붙들려 갈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부분적 진실만을 말할 따름이다. 부분적 진실만으로 실천 방향을 올바르게 이끌어 내기는 어렵

다. 우리는 여기에 덧붙여 몇 가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

우선 남한 체제가 북한 체제보다 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봐선 안 된다. 그랬다간 일부 좌파들이나, 뉴라이트처럼 남한 국가와 북한 국가 사이에서 남한을 편드는 우를 범할지 모른다.

지난 20여 년간 남한의 민주주의가 진전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 줌의 자본가·국가관료·정치인 들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계급사회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관점에서 북한도 남한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사적 자본가 대신 국가

관료가 집합적 자본가로서 축적을 위해 노동자 계급을 착취하고, 이를 유지하고자 강제력을 독점 사용해 피억압 대중을 감시·억압한다.

따라서 억압의 본질과 그 동학이 유사함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현주 기자가 북한의 억압과 남한의 그것을 비교한 게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필자 같은 양심수의 처지에서 보면 그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추호의 타협 없이 남한 우익들의 북한 인권 공세를 비판하고, 남한·미국의 대북 압박 등에도 단호히 반대해야 할 것이다.

김영익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어색함을 깨고 도전한 신문 판매

동료 교사에게 신문을 판매하기가 어색하고 어려웠다. 나의 정치성향을 나타내는 것도 조심스럽다. 그러다 용기를 내 신문을 권해 보기로 했다. 그러나 돈을 받는 것이 어색해 판매하는 신문이라는 말은 슬쩍 생략하고 내 돈으로 구입해 동료교사 세 명에게 신문을 건넸다.

모두 전교조 조합원이었으나 반응은 조금씩 달랐다. A는 “난 전교조라도 우파야. 교사가 정치활동까지 해야 하나?” B는 “선진국은 보장하는 것 같은데”라고 말했고, C는 “<한겨레 21>에서 다른 기사를 읽어서 알고 있다”고 했다. 나는 A에게 “정치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린 투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투표도 정치활동의 하

나잖아. 박정희 시대 교사들에게 선거운동 시켰잖아. 이런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권리가 정치적 중립이지. 신문 꼭 읽고 우리 다음에 토론 좀 해보자” 하며 헤어졌다.

매칠 후 동료들의 반응을 물어 보려고 전화를 했다.

나는 두 사람에게 진보적·독립적인 기사를 쓰기 위해 기업광고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신문이라고 말했다. A는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느냐”며 다음엔 꼭 돈을 주고 사서 읽겠다. 그리고 “교사는 종교적·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늘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C는 “전교조 교사가 조종동을 보는 경우를 많이 봤다.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한겨레>만 보기 때문에 좀 편향적인 사고를 하는데 <한겨레>는 많이 변했다. <레프트21>은 조금 더 원편인 듯하다. 다음엔 사서 보겠다”고 했다.

B는 “신문이 매우 격하며, 노조 중심의 치우친 시선 때문에 좀 부담스럽고, 머리에 쥐 날것 같았다. 하지만 신문을 보니 20대에 활동했던 것이 생각나고 있고 있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서 신선했다”고 말했다.

신문을 권할 때 신문의 취지를 잘 설명해야 한다. 지레 선입견을 가지고 제한할 필요가 없다.

박혜성 교사 노동자

등록금 투쟁에 나선 카이스트 학생들을 응원한다

<레프트21> 25호를 구경하던 내 동생이 자신의 모교인 카이스트(KAIST)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줬다. 카이스트 학부 총학생회는 지난해에 등록금 인하를 내걸고 당선했으며 3월 3일~4일 등록금 인하나 폐지를 요구하는 학생 총투표를 실시한다. 서남표 총장이 부임한 이래 계속된 학내 민주주의 탄압과 등록금 폭등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다.

서남표 총장은 MIT 기계공학과 학과장을 10년 이상 역임하면서 학과를 ‘혁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총장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그가 총장으로 부임해서 한 ‘혁신’은 대학에 시장 논리를 도

입하고 학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것이었다. 내 동생은 “총장이 대학에 자본주의를 도입하려 한다”면서 불쾌감을 나타냈다.

카이스트는 원래 국가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등록금은 없었고 소액 기성회비만 있었다. 그런데 서남표 총장은 학칙을 개정해 등록금을 신설했고, 그 금액은 한 학기당 최고 7백50만 원에 이르렀다. 계절학기 수강료도 다섯 곱절로 인상했다. 학생들이 반발에 나설 것을 우려하는지, 학교 당국은 총학생회 선거 후보

가 4년 만에 졸업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선거를 무산시켰다. 설상가상으로, 이런 내용을 폭로하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학생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카이스트판 미네르바 사건).

지금도 학교 당국은 총장을 ‘총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투표 게시물을 철거하는 등 만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탄압을 뚫고 카이스트 학생들의 총투표가 성사되길 바란다.

김종환

지면이 넘쳐 실리지 못한 독자편지는 본지 웹사이트(left21.com)에 실립니다.

민주노총은 왜 반전, 민주주의 집회 참가에 소극적이었을까?

저는 2008년도 촛불집회때 다함께를 알게 돼 얼마 전 가입한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2월 20일 서울역 집회에 참가하려고 춘천에서 서울까지 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민주노총 공공부문 집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민주노총의 모습을 봤습니다. 공공부문 집회가 끝나고 민주노총 공공부문 조합원들은 대부분 해산했습니다.

그 이후로 반전집회,민주노동당 탄압 반대 집회가 예정돼 있었고 민주노총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반전 집회는 노동자들의 관심이 덜 하다 쳐도 민주노동

당 탄압 반대 집회는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자유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집회였는데 민주노총이 공공부분 집회만 참가하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을 해산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과연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까지 하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언론매체를 통해 접한 민주노총의 모습은 매우 투쟁적이었는데, 그런 투쟁성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부분에만 국한된 것이라면 저는 과연 그것이 민주노총의 참 모습일지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홍현우

낙태 근절 캠페인과 처벌 시도는 여성을 공격하는 것

불법 낙태 근절 캠페인을 벌이는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의사들이 당신을 돕고 아기를 지킬 것”이라고 표방하지만, 그들의 행동 어디를 봐도 도우려는 대상에 여성은 없다.

나의 옛 직장 동료의 경험은 너무 끔찍하다. 결혼 전 임신을 하게 된 이 동료는 직장에 알려질 것이 두려워 제대로 산전검사를 받지 못했다. 월차, 생리휴가도 쓸 수 없어 걱정만 하던 사이 다섯 달이 지났고, 검사를 받았는데, 아이가 무뇌증을 갖

고 있었다. 결국 후기 낙태의 위험 부담과 정신적 충격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낙태수술을 받아야 했다.

저출산 방지 정책과 낙태 근절 캠페인은 팍팍한 현실 속에 자신의 삶을 계획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여성의 현실은 보지 않고, 낙태를 ‘생명경시’로 단순화시켜 여성의 결정에 도덕적 족쇄를 채운다. 여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낙태 처벌 시도에 더 많은 여성들이 항의해야 한다.

김지현

도요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를 리콜해야 한다

도요타 리콜 사태는 생산 과잉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자동차를 싼 값에 만들어야 하는 이윤 경쟁의 추악한 과정을 잘 보여 준다.

도요타는 과잉 생산된 자동차 시장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2000년부터 3년마다 총경비의 30퍼센트씩 절감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부품 단가 인하, 비정규직 확대 등을 시도했다.

그 결과 미국 3대 자동차 회사가 파산한 경제 위기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등한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한 가족이 가속페달 이상으로 숨지는 비극이 벌어졌다.

도요타가 잘 나갈 때 국내 자본가들도 칭송했던 도요타 모델이 실제로는 노동자에 대한 고통전가의 단적인 사례였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 도요타는 해마다 2조엔(25조 원)이 넘는 이익을 벌어들였고 12조엔(1백50조 원)이나 되는 유보금을

가지고 있음에도 2008년 말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을 이유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했다. 노동자 개개인을 경쟁시키는 성과주의적 노동 경쟁 방식이 노동자 간에 기술전수를 일부러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낳아 품질 이상의 원인이 됐다. 한 노동자는 이런 환경에서 너무 혹사당한 나머지 차량 주요 부품을 고의로 거꾸로 조립했다고 한다.

도요타는 마치 한국의 삼성처럼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해 광고비를 무기로 하고 있는 것도 밝혀졌다. 그래서 도요타에 비판적인 책들은 언론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요타 사태를 통해 교훈을 촉구하는 언론들은 단지 도요타가 창업 당시의 초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잉생산에도 필요 이상의 생산을 지속해야 할 정도의 비정상적인 체제가 진정한 문제다.

차경윤

새서울케이블티비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다

지난 2월 10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건물 앞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났다. 지역마다 케이블과 인터넷을 개설, 송출하는 업체인 ‘새울케이블티비(C&M)’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을 횡방 농기 위해 사측의 관리자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사찰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동자들의 노조 결성조차 자유롭지 않은 2010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러나 탄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열

마 전 이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이명박 정부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나라빚을 노동자 계급에게 전가하고,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익을 거두고도 노동자들을 해고하는데, 저항하지 않으면 자신의 삶을 지키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C&M 노조 소식은 이명박 하에서도 싸우려는 노동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박미혜 보건료노조 고대료원 지부 조직부장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한 분노가 네덜란드 정부를 무너뜨리다

마크 L 토마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지난주[2월 20일] 네덜란드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때문에 물락했다. 네덜란드는 서방 점령군 중 여덟 째로 많은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했다. 이제 네덜란드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게 돼 전쟁 수위를 한층 높이려는 버락 오바마의 계획이 타격을 입게 됐다. 네덜란드 총리 얀 페터 발케넨데는 의회가 네덜란드 군대를 2010년 말까지 철군하기로 결정한 것을 무시하고 아프가니스탄 파병 기간을 연장하려 했다. 미국 정부와 나토 동맹들은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 의회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넣었다. 발케넨데의 연정 파트너인 네덜란드 노동당은 원래 2006년 아프가니스탄 파병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노동당은 더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연정에서 탈퇴했고, 연정은 붕괴했다.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의 네덜란드인들이 자국 군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기를 바란다. 최근 정부 조사단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도 대중의 분노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2003년 당시 총리 발케넨데는 미국의 이라크 침략을 지지했다. 네덜란드 노동당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지한 탓에 지지율이 계속 하락해 왔다. 네덜란드 노동당은 연정 탈퇴로 다음 달 중요한 지역 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이 상승하기를 바란다. 대다수 네덜란드군은 우루즈간 주에 주



아프가니스탄 파병 반대를 외치는 네덜란드 시위대

둔하고 있다. 이곳은 최근 미군과 영국군 1만 5천 명이 2001년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작전을 벌이고 있는 헬만드 주 마르자 근처다. 오바마 정부는 다른 나토 동맹국들의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규모를 늘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오바마 정부는 3만 명 추가 증파를 진행중이고 나토 동맹들이 1만 명을 증파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동맹들은 지금까지 겨우 1천 명을 더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 중 절반은 영국군이다. 지난주[2월 21일] 우루즈간 주에서 나토 폭격으로 민간인 33명이 살해당했다. 나토 폭격기는 이동중이던 소형 버스

세 대를 공격했다. 우루즈간 주 주지사는 사망자가 모두 민간인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나토는 마르자에서 로켓 공격으로 민간인 12명이 죽었다고 인정했다. 민간인 학살은 반점령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후원을 받는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하미드 카르자이조차 때때로 그런 분노에 호응해야 했다. 지난주에 그는 마르자 공격으로 친척들이 살해당한 여덟 살배기 어린이의 사진을 들고 의회에 가기도 했다. 출처 영국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번역 김용욱 기자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잇속을 챙기는 한진그룹

한국에서 미국이 주도한 “테러와의 전쟁” 덕을 본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한진그룹이다. 1966년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군수물자를 수송해 피 묻은 돈을 챙긴 한진그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도 미군 군수물자를 수송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이 인천 국제공항에서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공항까지 미군 군수물자를 수송하면, 나보이 공항에서는 또 다른 계열사가 육로를 이용해 아프가니스탄까지 군수물자를 수송한다. 나보이 공항에서 수도 카불까지는 겨우 9백 킬로미터 거리다. 특히, 2009년 말부터 올 초까지 한진그룹이 아프가니스탄에 수송한 군수물

자가 급격히 늘었다. 이때는 바로 오바마가 3만 명이 넘는 미군을 증파하기로 결정한 직후다. 또, ‘제2의 팔루자’(2004년 부시는 이라크 팔루자 지역을 봉쇄해 2천 명이 넘는 이라크인들을 학살했다)를 만들려고 미군과 나토군 1만 5천 명이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 주 마르자에서 대규모 학살 작전을 준비하던 때다. 지금 미군과 나토군은 한진그룹이 가져다 준 막사에서 생활하고 생필품을 쓰면서 마르자 주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한진 그룹은 국내에서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노조와의 약속도 밥 먹듯이 어겼다. 여기에 해외에서

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학살하는 전쟁에서 이익을 취하다니 정말이지 탐욕스럽고 비열하기 짝이 없는 기업이다. 현재 한진그룹이 군수물자를 전달하는 통로는 앞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군인과 군수물자가 들어갈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을 하면 그에 따른 비극이 벌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나, 이명박 정부와 한진그룹의 탐욕 때문에 앞으로 이 경고가 현실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김덕업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재앙의 부메랑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안상수는 2월 25~2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모든 한나라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을 요구했다. 압도적인 반전 여론과 절반이 넘는 재파병 반대 여론을 묵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한 공청회도, 임무 종결 지역에 재파병하는 이유를 묻는 청문회도 거부했다.

한나라당과 미래희망연대, 무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한 국방위는 시민단체의 방청도 허락하지 않은 채 재파병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나라 정부는 도둑 파병이 전공이고, 거짓말은 복수 전공이다. 미군과 나토군이 헬만드 주 마르자에서 대공세를 시작하면서 민간인 학살이 급증했다. 미군과 나토군도 학살 작전을 벌이면서 이를 재건 작전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재건하러 간다면서 책정된 예산 대부분을 신무기 구입과 파병 부대 캠프 건설 비용에 배정했다. 사실, 지난번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때도 그랬다. 자이툰 부대 파병 비용 중 많은 돈이 점령에 동조할 쿠르드족 민병대를 양성하는 데 쓰였다. 그동안 이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악행들로 빈부격차 심화, 청소년 자살 급증, 민주적 권리 후퇴 등 한국 사회를 만신창

이스라엘에 살인 여권을 쥐어 준 서방 정부들

찰리 김버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하마스 지도자를 살해한 이스라엘의 암살단원들이 영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뉴스를 접하며 이런 질문을 던져 본다. 만약 이란 정부 요원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반대파 지도자를 암살하려고 영국 여권을 사용했다면 영국 정부의 반응은 어땠을까? 분명 길길이 뛰며 항의했을 것이고, 어쩌면 미사일 공격까지 감행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영국 정부는 고작 런던 주재 이스라엘 대사 론 프로소르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 공유”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프로소르 대사가 암살과 관련한 질의에 “노 코멘트”로 일관해도 아무런 추궁이 없었다. 이스라엘 첩보 기관인 모사드가 문서를 위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73년에 모사드 요원 실비아 라파엘은 노르웨이에서 암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모로코인 웨이터 한 명을 살해한 뒤 체포됐다. 그는 캐나다인 사진 작가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었다. 라파엘의 동료 암살단원들도 위조된 영국인·프랑스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1987년에는 이스라엘 군수업체의 배달원이 독일의 어느 공중전화 박스에 모사드 요원들이 사용할 영국 여권 다발을 놓고 간 사건이 있었다. 영국 정부는 재발 방지 조치가 취해졌다는 확인을 받아 냈다고만 발표했다. 1997년에는 모사드 암살단이 하마스의 현 최고 지도자인 할레드 마샬 암살을 기도하면서 변조된 캐나다 여권을 사용했다. 마샬의 귀에 독극물을 분사하려 한 요원 두 명이 요르단에서 체포됐다.

해독제 지금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끌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정부는 할레드 마샬의 생명을 구한 해독제를 넘겨줘야만 했다. 이스라엘은 또한 하마스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셰이크 아흐메드 야신도 석방했다. 2005년에는 이스라엘 요원 두 명이 뉴질랜드 여권을 불법 취득한 죄로 뉴질랜드에서 징역 6개월에 처해졌다. 그런데 최근 두바이에서 자행된 암살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이 많다. 이른바 “가짜 여권”들이 실제로 얼마나 가짜였는가? 이와 관련해서 영

국 정부 등이 이스라엘에 속았기는커녕 이스라엘과 공모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짙다. 따지고 보면 이들은 가짜 침공 같은 흉악 범죄에도 이스라엘과 협력해 왔다. 요인 암살 같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유명 저널리스트인 로버트 피스크의 두바이 취재원 한 명은 문제의 여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권에는] 홀로그램 사진과 생체인식 정보가 찍혀 있었다. 이건 위조 여권이 아니다. 실제로 등록된 명의를 사용했다.

“홀로그램이나 생체 정보를 누군가 위조할 수 있었다면, 그건 무엇을 뜻하는가?” 암살 용의자들 가운데 다섯 명이 미국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지난주에 모사드 요원의 제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암살] 작전이 개시되기 전에 그 작전에 대해 아주,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다. “영국은 이 작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암살 대상이 누군지도 몰랐다. 그러나 [암살단원들이] 영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다.”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암살 그 자체의 문제가 있다. 이스라엘이 무슨 권리로 마흐무드 알 마부흐를 살해했는가? 이에 대한 답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찾아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세계 어디서든 자기를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부여했다.

지난해 파키스탄 내 서부 접경 지역에서는 미군 무인정찰기가 동원된 공습 44건으로 “탈레반 지도자” 다섯 명과 더불어 민간인 7백여 명이 아무런 재판도 없이 살해당했다. 미국 CIA는, 콩고 지도자 파르리스 루뭇바 살해를 모의하고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암살을 거듭 시도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오랜 암살 전력을 갖고 있다. 중남미와 중동,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온갖 학살을 조직한 것도 CIA다. 2001년에 조지 부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암살 전문 부대를 창설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번엔 터져 나온 영국 여권 스캔들의 배후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억압에 동참해 온 제국주의의 추악한 역사가 있다. 영국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덮어 버리려 애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번역 천경록

에 대한 환멸과 추락하는 오바마 지지율에 가속 페달을 달게 될 것이다. 또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이라는 유례 없는 결정을 내린 이명박 정부는 네덜란드 연립정부가 파병 문제로 붕괴한 사건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재파병이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할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김덕업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기획팀장

공무원노조 규약 개정 이후



2월 20일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노동자들

사진 이윤선 기자

더 한층의 후퇴를 강요할 정부에 맞서 투쟁할 때

공무원노조가 총투표를 통해 규약을 개정했다.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고, ‘정치적 지위 향상’과 ‘강령’ 문구를 삭제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규약 개정이 어디까지나 설립신고를 위한 ‘실무용’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규약 개정은 불필요한 후퇴였다.

총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조합원들조차 고심을 거듭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규약이 개정되면 해임 통보를 받은 양성운 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잃을 수도 있는 데다가,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는 것도 내키지 않는 일이었다.

정부의 탄압과 공격에 맞서 자신감 있게 대응하려면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함께 공무원도임’ 등의 활동가들은 이번 총투표에서 반대를 선포하며 반대대표를 찍었다.

정부는 탄압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들

의 자신감을 꺾고, 정치 행동을 못거리게 하고 싶어 한다. 노조의 힘을 빼고 저항을 억누르면서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부는 지난해 말 두 차례나 설립신고를 반려하며 노조에 후퇴를 강요했다. 이명박 정부는 사실상 노조 설립 권리를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꿨고, 노조 간부들을 해임했다.

노조가 정부의 요구대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려는데도 행안부는 탄압을 멈추지 않았다. 곳곳에서 행안부 직원들과 경찰이 노조 사무실에 난입하고, 투표를 방해했다.

이런 비열한 탄압은 이명박 정부가 형식적 설립 요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을 보여 줬다. 적잖은 노조 간부들이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노동부 관계자의 말에 일말의 기대를 걸며, 규

약을 개정하면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말이다.

실제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노동부 관계자는 “조합원 자격을 갖지 못한 이들이 노조에서[서] 실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재반려 가능성을 내비쳤다.

설사 설립신고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정부는 탄압을 계속하며 민주노총 탈퇴 등 더 많은 후퇴를 강요할 것이다. 딱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호랑이는 결국 우리를 잡아 먹으려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압박에 굴복해 불필요한 타협을 하기보다, 투쟁을 조직하는 데 힘을 집중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3월 간부 결의대회와 5월 4만 조합원 총 집결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

박설 기자 snow@left21.com

전교조

“성과급은 돈으로 동기 부여하겠다는 천박한 논리”

2월 22일 교과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급)을 균등분배하려 할 경우 “해당 교사들은 공무원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하고, 학교와 학교장에게는 학교별 성과급 감액 등의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 서울지부 송재혁 참교육실장은 성과급을 폐지하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수년간 성과급을 균등하게 분배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정부는 이걸 성과급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게, 어찌됐건 개인 통장에는 돈이 차등지급돼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나누는 것은 성과급을 [받은] 후에 교사의 ‘소비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사적인 부분인 거죠. 개인에게 차등지급된 사실 그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정부에 의해서 차등지급은 이루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성과급을 사실상 사후 무력화해 온 건데, 이번에 차등지급액 폭이 많이 커졌어요. A등급과 C등급 차이가 거의 1백30만 원이 나요. 어찌 보면 균등분배의 필요성이 더 커졌죠.

성과급은 교사의 고도의 총체적인 교육 행위를 단순한 몇 가지 평가지표를 가지고 ABC로 낙인찍는 거예요. 교사의 교육 행위는 창의적 활동의 종합이기 때문에, 계량화하고 서열을 매기는 것이 불



반교육적인 차등성과급제 교사의 교육 행위를 계량화하고 서열을 매겨서는 안 된다.

사진 제임스 교육화영

가능한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성과급은] 산업체에서 볼트를 몇 개 만들었나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애초에 성과급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됐어요.

정부는 교사간 경쟁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건데, 돈이나 차별로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천박한 논리예요.

교사들의 사기를 부양하고 동기를 유발하려면, 성과급 같은 경쟁적인 체제가 아니라 학교의 민주화 — 교사들의 교육 행위가 학교장이나 교육당국의 명령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 스스로 자기 노동을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 가 필요해요.

동료 상호 간 진정성 있는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인 문화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시급하죠. 원래 교육 행위

는 교사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와의 협동적 체제 속에서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이런 경쟁 체제는 교사간 협동을 단절시키고 개인을 고립시키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성과급은 반교육적인 제도인 것이고 폐지해야 해요.

장기적으로 교원평가 결과가 성과급에 적용될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교사들의 불만이 더 커질 거구요. 자꾸 탄압을 반복하면 단기적으로는 위축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 여는 시점에는 분노가 크게 표출될 거예요. 이명박 정부가 교사들이 정부 교육 정책에 가진 거부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언젠간 본패를 보여 주게 될 겁니다.”

인터뷰·정리 이현주 기자 hyunju43@left21.com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이봉주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장

2월 20일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의원대회는 “상반기(4~5월)에 대정부 총력투쟁(총파업 포함)을 강력하게 전개”하자는 투쟁 계획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지금 현장에서는 노동자성이 부인되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약덕업자들이 변호판을 탈취해 간다던가 자신도 모르게 자가용으로 용도 변경돼 차를 빼앗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약속했던 표준요금제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움직임도 있다. 우리는 하청업체로부터 직접 배차하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는데 정부는 자본의 요구에 따라 직영운송으로 바꾸려고 한다. 정부에서 허가 받은 화물노동자들은 누구나 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회사들은 자기네와 일하려면 변호판을 사라고 요구한다. 법이 바뀌면 다른 회사일을 할 때마다 변호판 값을 물어야 해 변호판 값이 폭등하고 브로커들의 배만 불릴 것이다.

박종태 열사 투쟁 이후 받아온 압박이 심한데 이를 정면돌파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시기를 집중해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화물 노동자들은 지난 8년간 매년 생존권 투쟁을 해왔다. 올해도 싸워

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3월부터 홍보전 및 건강검진을 하면서 조직화하려고 한다. 지난해 투쟁 이후 힘든 일들이 많았고, 현장분위기가 자신감이 넘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분노는 이미 넘치고 있다. 의지를 갖고 투쟁을 조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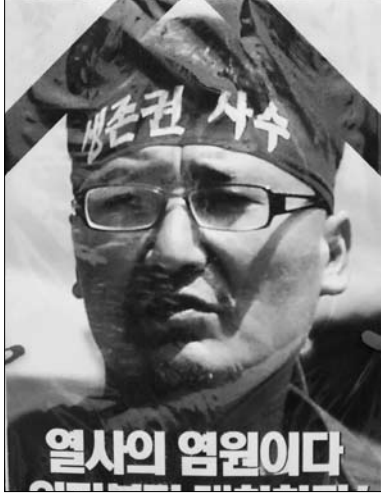


사진 이매진 기자

지난해 화물연대 박종태 열사 투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

누더기가 된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대표 브랜드로 내세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든든학자금)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이미 15만 명이 넘는 대학생이 대출을 받았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공부하는 동안에 학생들도 마음이 든든하고 학부형도 마음이 든든”해 ‘든든학자금’으로 명칭을 지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온갖 생색을 다 냈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은 조금도 든든하지 않다.

이미 등록금 총액이 높은 상황에서 고금리 고시(올해 5.7퍼센트)에 상환 이후부터는 복리로 이자가 부과돼 대학생들은 빚더미로 안고 살아야 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이자율 5.8퍼센트인 모델로 3천2백만 원을 빌린다면 25년 동안 갚아야 할 비용은 무려 9천7백5만 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상환 기준소득을 최저생계비에 맞추고 상환율을 20퍼센트로 책정했는데, 최저생계비를 겨우 벌어도 20퍼센트 상환율로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에 채무 사실을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땐 과태료를 최대 3백45만 원이나 내야 한다.

군 복무중에 이자를 부과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마저도 수능 6등급 이내거나 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들로 대출 자격을 제한했다. 성적 제한이 “성취육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경영이 부실한 사립대가 “이 제도를 통해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2011년부터는 “(부실 사립대)명단을 공개하고” 부실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는 “대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 양은주 기자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내모는 정부

여기에 보수 언론들은 한 술 더 떠 ‘든든학자금’을 “파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대출 대상을 “인중 받은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들로 한정”하고, 대학별 상환 실적을 대학별 대출가능총액 배정과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앞으로 ‘든든학자금’은 더욱 누더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바로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대표 브랜드의 실체다.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이명박은 고액 등록금과 빚 때문에 고통 받는 대학생과 서민들의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성지현 이화여대 학생

이명박 집권 2년



2008년 촛불항쟁 때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7퍼센트까지 추락하며 퇴진 위기에 내몰렸다.

사진 이윤선 기자

반감과 저항에 부딪혀 만성적 위기에 시달리다

2008년 2월 15일에 취임한 이명박은 곧 집권 2년차를 마감하고 집권 3년차를 맞이한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 부패한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한 것은 한국 사회 대중의 보수화 때문이 아니었다. 이명박은 고작 유권자 3분의 1에게서 표를 얻었을 뿐이다. 나머지 3분의 2는 다른 후보에게 표를 던지거나 아예 투표를 하지 않았다.

기대를 저버리고 이라크 파병과 한미 FTA 등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환멸 덕분에 이명박이 유권자 3분의 1의 지지라도 받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등장이 독재 정부로 회귀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민중 운동의 조직과 의식이 무너지지 않은 상황에서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가보안법 등이 여전히 있지만 대체적인 의회 절차가 존재하고 노동조합과 노동자 정당을 결성해서 활동할 수 있기에 이명박 정부도 준(準)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가 한국 지배계급의 개혁파(비주류)에 기반을 뒀다면 이명박 정부는 지배계급 보수파(주류)에 기반을 둔다. 즉 재벌, 거대 언론사주, 주식·땅 부자들에게서 돈, 조직, 인력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 사회 주류 지배계급은 미 제국주의에 빌붙어 군사독재와 정경유착 속에서 민주주의와 노동자 권리를 짓밟으며 자본을 축적해 왔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흐름에 적극 올라타 국제적 경쟁에 뛰어들었고, 1987년 이후 노동자·민중 운동에 밀려 일부 양보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을 도로 빼앗으려 인간됨을 써 왔고, 특히 1997년 IMF 위기로 대표되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 이들은 노동계급을 쥐어짜는 데 혈안이 됐다.

따라서 이들은 친제국주의적이고 부정부패에 찌들었으며 반민주·반노동자적이다. 이것은 고스란히 이명박 정부의 특징이다. 이명박은 격화하는 국제적 경쟁 속에서 더 잔인하고 냉혹해진 지배계급을 대표한다.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선진화'와 '경제 살리기'는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한국 자본주의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명박

은 임기 초부터 “제가 친기업적임은 분명하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를 만들겠다”며 감세, 민영화,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고용유연화 등을 추진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 파병도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연결돼 있다. 한국의 주요 재벌들은 이미 다국적 기업이 돼서 세계적 경쟁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한국 지배계급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과 그것의 과시를 원한다.

이런 정책이 낳을 저항과 반발을 봉쇄하고 약화시키는 것 또한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과제다. 이명박 정부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로 “엄격한 법집행 확립”을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들은 1987년 이후 투쟁 속에서 조직과 의식을 성장시켜 온 노동자·민중 운동의 손과 발을 묶어서 정책 추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싶어 했다.

“무엇 하나 화끈하게 이룬 것이 없다”

그러나 집권 초기 ‘불도저’라 불리며 보수적 지배자들과 기업주들의 큰 기대를 모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2년 동안 막상 이뤄 낸 일은 많지 않다. 집권 첫 해에는 촛불항쟁에 파묻혀 퇴진 위기까지 몰리는 등 ‘잃어버린 1년’을 보내야 했다.

지난해에는 미디어법 등 일부 악법들을 처리하긴 했지만 아직 남아 있는 과제들이 점점산중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화끈하게 이룬 것이 없다”(중앙대 교수 김영복, <조선일보> 2009년 11월 1일치)는 불만이 나온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의 정책 추진이 항상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2년간 촛불항쟁, 용산참사 항의 시위, 언론노조 파업, 화물연대 파업, 노무현 조문 정국, 쌍용차 점거 파업, 철도노조 파업 등이 이어졌고 이명박 정부는 거듭 정치 위기에 빠지며 일부 개혁을 포기해야 했다.

1987년 이후에 노동자·민중이 투쟁을 통해 쌓아 올린 의식과 조직은 이명박 정부가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지난해 8·15를 전후해 이명박이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본질을 ‘친서민’이라는 포장지로 가리기 시작한 것도 거듭

된 저항과 정부에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서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들고 나타나서 모든 정치적 성과를 뽐금 집어 먹으려는 압제”(민주노동당 2009년 3월 2일 논평) 짓만 해왔다. 이명박을 도와서 보수적 지배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동시에, 이명박에게 불만을 느끼는 대중에게 환심을 사야 하는 상반되는 필요 때문이었다.

민주당은 이명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별로 대안으로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뉴민주당 플랜’은 ‘한나라당 따라하기’라는 의심만 불러일으켰고, 이명박에 맞선 투쟁에서 민주당은 거듭 중요하다가 타협했다.

이명박은 어디로

이명박 정부는 노동계급과 피억압 민중의 삶을 공격해 기업 이윤을 높이려는 정책들을 포기할 수 없는 처지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경제 위기는 이명박 정부가 그런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난해 경기부양을 통해 위기에 처한 재벌·기업주들의 손실을 매워 주는 과정에서 생긴 어마어마한 국가부채다. 한국은행은 최근 정부, 공기업, 공적금융기관의 부채액 합계가 7백10조 원에 이르며 이는 GDP 대비 69퍼센트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막대한 부채에 의존한 ‘경기 회복’ 덕분에 최근 이명박의 지지율이 그나마 50퍼센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더불어 이명박이 싫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경기도 회복되고 천서민도 한다니 일단 두고 보자’ 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도 지적하듯이 “50퍼센트 인기도는 … 국민 실생활 개선과 연결되지 않을 때 거품처럼 급속도로 잦아”들 것이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와 막대한 국가부채의 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공격에 박차를 가하려 한다. 이런 정책 추진은 서민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하고, 이에 따라 이명박에 대한 지지는 갈수록 협소해질 것이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지방선거에서 ‘범야권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50.7퍼센트인 반면, ‘범여권을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31.6퍼센트에 불과했다(<레디앙> 2010년 1월 6일).

중간평가 성격인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레임덕이 가속화할 것이다. 이미 세종시를 둘러싼 여권 내부 분열은 심각하다.

레임덕으로 정권의 통제력이 약해지고 정권에 대한 이반이 가속화할 때 부패스캔들 등이 터져 나올 수 있다. 부패는 ‘부패원조당’이라 불려 온 한나라당과 이명박에게 시한폭탄의 뇌관 같은 것이다.

세계경제가 다시 ‘더블 덩’으로 빠져들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게 되면 ‘경제 살리기’라는 기둥이 무너지며 이명박 정부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모면하려고 개헌 등의 꿈을 부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명박은 정권과 정책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쟁점을 돌리고, 이런 논의를 주도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정치 위기가 심각하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강력할 때는 개헌 같은 카드도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 민주당이 그 반사이익을 차지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달리 NGO 등과 연계가 있는 등 포퓰리즘적 기반이 있지만, 자본가 야당이라는 계급적 한계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반민주 정책에 진정으로 맞설 수 없다. 그러나 정치적 진공 상태가 언제까지나 방치될 수는 없기에 진보진영이 대안을 건설하지 못하면, 민주당에 품는 기대와 환상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노동자 투쟁의 힘

더구나 현재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주당과 민주대연합(“인민전선”)을 추구하는 진보진영 일부의 태도가 더 분명해지고 있다. “연합 공천”, “연립 정부” 등의 주장이 쏟아진다.

사안에 따른 전술적 제휴를 넘어서 이런 인민전선 추구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에 해악을 끼친다.

우선 진보진영은 민주당과 동맹하기 위해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신들의 요구와 강령을 낮춰야 한다. 실제로 ‘희망과 대안’이 지방선거에서 야

권 연대를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라고 발표한 ‘3대 방향과 5대 과제’에는 한미 FTA, 비정규직법, 해외 파병 등의 의제가 다 빠졌다.

또, 인민전선은 민주당의 한계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진보진영의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당과 동맹을 추구하다 노동계급의 정치적 독자성을 훼손시켜 계급투쟁을 제약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미 지난 2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돼 왔고, 그 덕분에 이명박은 몇 번이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명박의 친기업·반민주적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은 민주당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에게 있다. 조직 노동자들은 2008년 촛불항쟁이라는 거대한 정치투쟁의 ‘외부충격’을 받고 나서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언론노조 파업, 쌍용차 파업, 철도 파업 등은 노동자 투쟁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조직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기반인 재벌과 대기업주들이 이윤을 얻지 못하도록 생산을 멈출 수 있는 힘이 있다. 예컨대 2003년 5월 화물연대 파업 때 노동자들은 부산항과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 등 물류의 심장과 동맥을 봉쇄해서 수출입을 중단시키며 자본가들에게 막강한 타격을 줬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물류를 마비시켜 나라를 결판낼 수 있는 강자들”이라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런 조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행동이 바로 이명박의 최대 위기였던 2008년 촛불항쟁 때 ‘실종된 고리’였다. 이제 이 고리가 채워져야 할 뿐 아니라 중심 고리가 돼서 사슬 전체를 끌어 올려야 한다.

조직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뿐 아니라 반민주적 탄압에도 앞장서 맞서야 한다. 친자본가적인 민주당에 정치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요하는 정부에 맞선 정면 대결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투사들은 노동자 투쟁에 관여해 개혁주의자들과 공동전선을 통해 함께 투쟁하고 연대를 건설하면서도 노동자 투쟁이 이런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투해야 한다.

전지윤 기자 ralm71@left21.com

이명박 정부의 경제 정책

‘재벌천국 서민지옥’을 위해 달려 온 2년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 747 공약 (7퍼센트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경제 7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야말로 최고의 서민정책”이라며 일자리 3백만 개 창출도 약속했고, 통신비 인하, 반값 등록금 등 서민 생활 지원도 공약했다.

그러나 허황된 747 공약은 이룩하기도 전에 사라졌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뜻하는 바는 부자 감세, 민영화, 임금 삭감, 비정규직 확대, 고용유연화 등을 통해 노동자·서민에게 경제 위기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은 거대 통신사들에 밀려 유야무야돼 버렸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두고는 “등록금이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하고 말한다. 학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주부에게는 “학원을 보내

지 않으면 될 것 아닌가” 하고 대꾸한다.

기업을 지원할 때는 “전봇대를 뽑으라”며 세세하게 개입하더니, 가장 역점을 두겠다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민간의 세세한 영역까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직자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만 말하는 게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본질이다.

높아지는 실업률 대책으로는 희망 근로나 공공 인턴처럼 고작 저질의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쳤다. 단기 일자리 지원이 줄어들자 올해 1월 공식 실업자가 1백21만 6천 명으로 늘어났다. 공식 실업자 수가 1백만 명이 넘은 것은 이번 경제 위기 후 처음인데 실업률로 따져도 3.6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폭증한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은 부유층과 기업주를 지원하는 데는 혈안이 돼서 달려들

고 있다.

집권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하고 법인세를 깎아 줘 부유층·대기업에게 세금 혜택을 90조 원이나 줬고, 석유·곡물 가격이 급등하던 2008년에 “원화가 고평가돼 있었다”며 원화 가치 하락을 용인해 주요 수출재벌들에게 엄청난 이윤을 보장했다. 그 때문에 환율 폭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대폭 상승해 노동자·서민은 큰 피해를 봤다.

저질의 단기 일자리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자 이명박 정부는 금융권에 자금을 지원하더니, 4대강 사업·양도소득세 면제 등으로 건설업체를, 자산관리공사·산업은행이 앞장선 선박펀드 조성으로 조선·해운산업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해고에 반대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올해에도 한진중공업이나 금호타이어 등에서 노동자 해고와 임금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다.

부자 감세·기업주 지원으로 재정적자가 급증해 올해에는 4백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늘어나는 재정적자에 대처해야 한다며 민영화, 공기업 임금 삭감과 해고 등의 ‘공공부문 선진화’와 복지 삭감을 밀어붙이고, 공무원·교사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기업주 살리기만 신경쓰고, 경제 위기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 노동자 투쟁이 부상하고 있다. 이 투쟁에 연대하고 지원해 이명박 정부를 굴복시켜야만 보통사람들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강동훈 기자 kdh@left21.com



키 리졸브 훈련중인 미군 이 훈련은 한반도 상황을 급랭시키는 계기가 됐다.



1퍼센트 부자들만 대변하는 정부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이명박 정부 2년 동안 남북관계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국방부는 결핍하면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타격하겠다고 협박하고, 북한 당국은 이명박 정부더러 “역적”, “괴뢰 도당”이라고 비난하는 등 남북 당국 간 험한 말이 오갔다.

말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남북 교류 차단, 로켓 발사와 핵 실험, 게다가 서해 교전도 벌어졌다. 집권 2년 동안 평화를 바라는 민중은 늘 불안에 떨었다.

애초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대북 정책을 표방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북한에 친화적인 이념적 지향에 좌우됐다고 비판하며, 자신은 이념을 벗어난 유연한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이야말로 실용주의에 가까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정경분리 관점에 따라 한편에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선 북한과의 교류와 인도적 지원도 늘렸다.

이런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은 동쪽에선 금강산 관광을 하고 서쪽에선 교전을 벌이는 식의 모순을 낳았고, 이런 모순 때문에 남북관계는 화해·협

력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었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전임 정부 대북정책의 모순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말로는 실용주의를 내세웠지만, 자신의 국내 정치적 기반을 의식해 오히려 더 일관된 대북 강경정책을 추진했다.

정경분리 관점을 폐기하고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 교류의 전제 조건으로 선(先) 북핵 폐기를 내세웠다. 이 때문에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는 급격히 축소됐고, 북한 당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실용주의’?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남북관계는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영향을 받기 마련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북미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북한이 남한 당국을 대하는 태도가 먼저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도 조금씩 변했다. 북미 대화에서 주변화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저항과 반발에 밀린 ‘중도·실용’ 제스처의 일환으로,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심지어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는데, 이명박은 경

제 위기 고봉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을 이용하려 할 것이다(정상회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레프트21> 25호에 실린 ‘남북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기사를 참고하시오).

물론 남북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북미관계가 대화 국면으로 변했다고 해도 여전히 불안정을 겪고 있고, 남한 주류 정치에서는 여전히 우파들이 강력하게 파리를 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대북 강경정책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있다.

쌀과 비료 지원 문제는 “전략적 지원”이어야 한다면, 앞으로도 북핵 문제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재해 해제 문제도 “개별 국가끼리 협의할 문제가 아니다”하며 거절했다. 평화협정 체결 문제도 선(先) 비핵화를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북 압박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은 6.1퍼센트, 이명박의 주특기인 ‘기다리기’ 전략을 지지하는 사람은 14.9퍼센트뿐이었다. 반면 남북정상회담은 87퍼센트가 지지했다.

이는 대북 강경정책이 바뀌기를 바라는 정서가 표현된 것이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흘리면서도 강경한 대북정책을 고수하

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불안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이 근본에서 바뀔 수 있을까?

남북관계의 향방은 북미관계의 향방에 달렸으므로, 오바마에게서 힘을 빌려야 하는가? 그러나 북미관계가 단기적으로 유화 국면이긴 해도, 세계 경제 위기 상황에서 최근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중 관계가 삐걱거리는 등 강대국 간 갈등이 낳는 불안정이 커지고 있고 북미관계는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오바마의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가로막는 장본인으로 돌변할 수 있다.

민주당과 반MB 전선을 맺어 ‘통일 지향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가?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당 또한 미국의 대북 압박을 거스르지 못했고 스스로 압박에 동조해, 한반도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다.

진정한 한반도 평화의 동력은 강대국 간 경쟁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체제를 변혁하려는 국제 노동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투쟁에 있다.

정병호 기자 multask@left21.com

정기구독을 하면 <레프트21>을 빠짐없이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을 생각한다» 광고를 신지 않는 신문들, 삼성과 이견회를 비판하는 글들을 거부하는 신문들을 보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레프트21>이야말로 기성 언론과는 달리 그들이 외면하는 체제의 진실과 운동의 목소리를 담은 바로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3월이면 <레프트21>이 창간 1주년을 맞습니다.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이 없었으면, 창간 1주년도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레프트21>은 더 많은 독자와 호흡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독자들께서도 진보 언론의 새싹을 키우는 데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애정을 계속 쏟아 주십시오.

투쟁하는 노동자와 학생, 억압받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꾸준히 만나고자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겠다는 독자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 옵니다.

아이티 참사와 위기의 근원을 토론하던 한 병원 노동자는 기성 언론이 다루지 않는 문제를 <레프트21>이 심도 있게 다룬 점이 인상적이었다며 구독을 신청했습니다.

얼마 전 상경투쟁 때 만난 금호타이어 노동자는 예전에 <레프트21>을 본 적이 있는데 금호타이어 투쟁 소식을 다룬 <레프트21>이 매우 반갑다며 정기구독하겠다고 했습니다.

북직투쟁중인 어느 공장의 해고 노동자는 <레프트21>을 구독하는 동료에게 몇 차례 신문을 빌려 보다가 아예 정기적으로 구독해야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친구를 통해 <레프트21>을 알게 됐다는 한 분은 못 보고 지나가는 호가 있으면 너무 아쉬워서 빠짐없이 받아 보려고 정기 구독을 신청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방에 사는 독자들이 안정적으로 신문을 받아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기구독입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서점이나 정기적 거리 판매대에서 <레프트21>을 만날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진보적 신문이 유통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속한 단체나 노동조합에도 정기구독을 권유해 주십시오. 한 가스 노동자 독자는 자신만 보기에는 아깝다며, 더 많은 동료들이 노조 사무실에서도 신문을 볼 수 있게 노동조합에 정기구독을 제안했고 노조는 정기구독을 하기로 했습니다.

<레프트21>이 더 많은 사람들의 손에 닿을 수 있게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간 때부터 정기구독을 해온 독자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구독을 연장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레프트21>은 앞으로도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파헤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진정한 대량 ‘설득’ 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레프트21> 드림





대학 신입생들에게 추천하는 도서



대학 신입생 추천 도서를 소개하는 글을 구상하느라 며칠을 강강댔습니다. 신입생에게 추천한다는 말에 더 겁을 먹었죠. 일단 지난해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추천도서 목록처럼 너무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다시 읽어 봐도 정말 훌륭한 책들과 신입생 독자들을 연결하는 막중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

다. 어떤 이들은 부른 희망을 안고, 어떤 이들은 새로운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대학에 입학할 것입니다. 저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있을 것이고요, 이쯤 돼서 '나는 신입생 때 무엇을 고민했지?' 하며 자문해 봅니다.

등록금 인상 반대 시위에 참가한 한 대학생이 경찰 곤봉에 맞아 죽은 사건, 열심히 일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 사람들이 제 가족뿐 아니라 도처에 있다는 발견, 대학에서 하는 공부는 이런 문제들을 전혀 해명해 주지 않는다는 답답함 등이 저로 하여금 정이롭지 못한 사회 현실에 눈 뜨고 행동에 나서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경험은 10년도 더 된 경험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너무 구닥다리 티 내는 거 아닌가' 하고 자책하는 와중에도, 지난해 있었던 용산 참사, 정권의 반민주적 악행, 대량해고와 노동자들의 저항 등이 떠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이 정이롭지 못하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을 아는 사람들 모두가 현실을 바꾸려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레프트21>을 읽는 신입생들이 직간접 경험을 통해 접한 불의에 눈감지 않고 대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몇 권 추천해 보겠습니다.

정병호 기자 multitask@left21.com

현실이 불의하다고 해서 절망할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는 행동에 나섭니다. 얼마 전 타계한 미국의 진보적 역사가이자 사회운동가인 하워드 진은 보통 사람들의 행동에서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출간된 자서전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이후)와 2009년 출간된 《하워드 진, 역사의 힘》(예담)에서 그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 희망을 갖는 것은 단지 어리석음 정도로 낭만적이어서가 아니다. 인류의 역사 자체가 절망뿐 아니라 열정, 희생, 용기와 연대 정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런 복잡한 역사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다. 만약 우리가 오직 최악의 상황만을 본다면, 우리의 행동 의지는 꺾일 것이다. 만약 우리가 민중이 용맹하게 행동했던 때와 장소를 기억한다면 — 그런 경우는 무수히 많다 — 우리는 행동하려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중)



하워드 진의 책 중에 빠뜨리지 않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마르크스 뉴욕에 가다》(당대)입니다. 마르크스가 죽은 지 1백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마르크스의 사상이 유효한 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연극으로도 공연됐죠.

“나는 흔히 마르크스를 평가할 때 한 가지 빠뜨리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마르크스를 이야기할 때 언제나 이론가, 사상가로서의 마르크스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마르크스는 혁명가로서도 보기 드물게 적극적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나는 마르크스의 이런 다른 면, 그러니까 현실에 깊숙이 참여한 열정적인 혁명가로서의 마르크스를 무대 위에 올리고 싶었다. ...

“나는 마르크스가 자신의 이론이 무자비한 스탈린주의를 옹호하기 위해 왜곡된 것을 보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었다. 나는 세

계 곳곳에서 억압적인 통치 체제를 구축한 사이비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자본주의의 승리에 자못 흡족해하는 서구 정치가와 저술가들로부터도 마르크스를 구해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

“나는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이 오늘날에도 근본적으로 옳다는 것을 보여 주고 싶었다. 그의 분석이 옳다는 것은 날마다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사건들이 명명백백히 입증해 주고 있다.”

하워드 진은 이 책에서 자신이 마르크스가 쓴 《공산당 선언》(이론과 실천)에서 매우 큰 영감을 얻었다고 썼는데, 《공산당 선언》은 제가 다음으로 추천할 책입니다.

이 소책자는 서유럽에서 자본주의가 막 태동하는 시기에, 자본주의의 동력과 모순,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세력인 노동자 계급의 등장과 잠재력, 혁명가의 과제를 매우 짧은 글에서 압축적으로 표현한 탁월한 저작입니다.

마르크스가 1백60여 년 전에 쓴 이 소책자를 읽다 보면, 오늘날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한 묘사들을 접하면서 흡칫 놀라게 됩니다. 오늘날의 현실에도 너무나 와 닿아, 여러 해에 걸쳐 다시금 읽게 되는 저작입니다.



한편 마르크스 하면,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비판한 사상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자본》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 세계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비판이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이 생각만큼 읽기 쉽지는 않습니다. 입문서로 두 권을 추천합니다. 리오 휴버먼이 쓴 《자본주의의 역사 바로 알기》(책벌레)와 피에르 잘레가 쓴 《자본주의란 무엇인가》(책갈피)입니다.

특히 《자본주의의 역사 바로 알기》는 브라질에서 3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인데다 한국에서도 대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읽혔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추천해 더 유명해진 책입니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어떻게 태동했고, 어떻게 변해 왔는지 매우 쉬운 예들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는 초

심자들이 읽기 좋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입문서입니다.

다음으로 추천할 책들은 한국의 노동 현실에 관한 책들입니다. 주당 노동시간, 산업재해 빈도 등에서 한국 노동자의 삶이 열악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죠. 더구나 정부와 기업주들은 대량해고, 임금삭감, 복지 축소 등 본격적으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합니다.



이에 맞선 저항이 두려웠는지 최근 운동 탄압 전담 검사들이 노동운동을 잘 알아야 한다며 《전태일 평전》을 열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이 싹트기 전인 40년 전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일하던 재단사 전태일은 당시의 노동 현실을 고발하며 1970년 11월 13일 제 몸을 불살랐습니다.

그 계기로 노동 현실은 조금씩 알려졌고, 1980~90년대 《전태일 평전》을 읽은 수많은 대학생들이 '나에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태일의 소망을 접하고는 노동자 투쟁 지원 운동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물론 1970년대에 비해 오늘날 한국 경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은 여전히 고된 노동에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는 열악한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런 오늘날 노동자의 현실을 가슴 절절하게 고발한 책이 한진중공업 여성 용접공 출신 김진숙 씨가 쓴 《소금꽃나무》(후마니타스)입니다.

한진중공업은 민주노조를 결성하자마자 노조위원장이 살해당하고, 2003년에도 노조위원장이 1백29일 투쟁 끝에 자살을 하는 등 매우 격렬한 쟁의를 겪은 작업장입니다. 2002년 한진중공업 사측은 일한 지 21년이나 된 노동자 임금이 세금 떼고 80만 원인 현실에서 임금동결과 대량해고를 강행했는데, 최근에도 대량해고로 인해 사측과 노동자들 간 긴장이 첨예하게 형성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엄청난 이윤을 얻는 동안 작업복 등이 땀범벅이 돼 '소금꽃'이 필 정도로 일하고도 해고를 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김진숙 씨는 단지 노동자가 불쌍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세상의 부를 만드는 주인공이고, 노동자들의 투쟁은 자신에게 씌워진 족쇄를 깨고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는 투쟁

이라고 말합니다.

“참 사는 것 같았다. 싸워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노동자들의 투쟁은 위험해 보인다. 싸워서 얻은 해방감을 단 하루도 누려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노동조합을 지키겠다고 목숨까지 거는 이들은 무모해 보인다. 그들은 아직도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북선은 우리가 만들었다.”

그럼에도 2000년대 동안 노동운동은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주들, 보수 언론은 정규직 노동자를 '귀족'이니, 이기적이라느니 하며 비난했습니다. 이런 논리를 시원하게 반박하는 책으로 하종강 씨가 쓴 《그래도 희망은 노동운동》(후마니타스)을 추천합니다.

끝으로 민중의 행동으로 세계를 뒤바꾼 역사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크리스 하먼의 《민중의 세계사》(책갈피)는 왕이나 영웅 등 지배자들의 관점으로 쓴 기존의 역사관을 배격합니다. 역사를 민중의 투쟁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며, 인류 역사가 어떻게 민중 자신의 행동으로 변해 왔는지 살펴보는 훌륭한 저작입니다.



민중의 행동이 세계를 바꾼 역사는 무수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1917년 러시아 혁명을 들 수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일시적이거나 노동자와 민중이 세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 준 사건이었습니

다. 혁명의 순간을 생생히 기록한 《세계를 뒤집은 열혈》(책갈피)도 추천합니다. 당시 혁명을 직접 취재한 미국인 기자 존 리드는 혁명의 주인공이었던 민중의 행동과 열망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책들이 신입생 여러분이 불의에 눈 뜨고 맞서 행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 글이 얼마나 책들의 진가를 잘 드러냈는지는 솔직히 걱정이 듭니다. 미흡하다고 느끼신다면, 직접 책을 펼쳐 보시기를 권합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사회포럼에 초대합니다

서울 남부 사회포럼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인가?

연사: 김용욱 <레프트21> 기자
일시: 3월 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 스터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빌딩)

참가비: 4천 원
문의: 010-5784-3175

서울 중북부 사회포럼
불황기의 정치·경제와 노동자 투쟁

연사: 강철구 '다함께' 활동가
일시: 3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대학로 한성대 에듀센터 807호
(해화역 4번 출구 도보 3분 거리, CGV 옆)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3362-1968

서울 남부 사회포럼
1930년대 대불황에서 배운다 — 불황기의 정치·경제와 노동자 투쟁

연사: 정종남 '다함께' 활동가
일시: 3월 1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강남 스터디 605호
(강남역 6번 출구 외환은행 빌딩)

참가비: 4천 원
문의: 010-5784-3175

서울 동부 사회포럼
경쟁없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연사: 김명신(핀란드 교육혁명) 공동저자,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회장, 강동훈(레프트21) 기자
일시: 3월 17일(수) 저녁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1회의실(건대역 6번출구)

참가비: 일반인 3천 원 / 학생 1천5백 원
문의: 02-447-0397
http://blog.naver.com/atgeforum

박상표 칼럼

한·캐나다 FTA 때문에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된다면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편집국장

최근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둘러싼 논란에서 국가권력은 전형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캐나다는 광우병 발생으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처가 WTO 최혜국 대우에 위배되며, 부당한 절차 지연 등에 해당되고, 가족전염병예방법 중 일부 조항이 국제기준에 위배되며,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WTO에 제소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국회가 캐나다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과 야당이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현재 WTO 제소절차가 진행되어 있어 공개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7일 청와대에서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직후 공동회견에서 “한국은 [캐나다산 쇠고기]를 수입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의 논리대로라면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선언’은 분정 상대국인 캐나다가 증거로 사용해 WTO 패널 판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입에 침이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던 국격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이라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광우병 예측에 실패한 농식품부의 현지조사보고서

농식품부는 지난 2006년 캐나다 현지조사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광우병 재발 가능성에 대해 “나이트 소에서 1~2두 재발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다. 2006년 1월 농식품부의 현지조사 이후 캐나다에서 광우병 사례가 12건이 추가로 발생했으며, 2007년 3건, 2008년 4건, 2009년 1건 등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엉터리 예측으로 헛다리를 짚은 과거를 의식해서인지 2008년 11월 캐나다 현지조사보고서와 2009년 12월 민간전문가 캐나다 현지조사

보고서를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캐나다의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 제거정책도 EU나 일본보다 미흡하다. 일본과 EU가 모든 연령에서 SRM으로 지정한 편도를 캐나다는 30개월 이상에서만 제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EU에서는 12개월 이상, 일본에서는 모든 연령에서 제거하는 뇌, 안구, 머리뼈, 삼차신경절, 척수를 30개월 이상에서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30개월 미만에서는 이러한 부위를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광우병 위험을 예방하기에 부족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게다가 EU에서 SRM으로 지정한 내장과 장간막을 식용 허용 부위로 지정해 이 부위들의 수입이 허용되면 한국 국민의 식습관상 광우병이 유행을 위협이 있다.

캐나다는 현재 도축소의 약 1.3퍼센트만을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는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걸러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검사비율이다. 2005년 EU 25개국이 광우병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정상적인 소 8백60만 7천51마리를 도축한 다음에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백13건이나 광우병 양성이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아무런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광우병 양성인 소가 나온 경우가 12건(전체 발생건수의 33퍼센트)이나 됐다.

캐나다의 사료정책도 광우병 위험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 1997년 사료규제 조처 이후에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무려 12건(75퍼센트)이나 된다는 사실은 이러한 우려가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부터 현재 미국이나 캐나다가 시행하고 있는 사료규제 조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는데도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양성인 소가 4건(11퍼센트)이나 확인됐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한·캐나다 FTA 걸림돌 제거

그렇다면 정부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광우

병이 발생하고 있고, SRM 제거나 사료규제정책도 완전하지 않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를 시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외교통상부가 12월 16일 국회에 보고한 ‘한·캐나다 FTA 현황’ 문서를 보면, 2008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13차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캐나다 정부는 “쇠고기 광우병 검역 문제의 해결 없이는 FTA의 타결·비준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2년 가까이 한·캐나다 FTA 협상 개최가 지연되고 있으나, 최근 양측은 “FTA와 광우병 이슈를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졸속 개방 때도 “한·미 FTA와 광우병 이슈는 별개”라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되풀이했던 정부의 보고서를 순진하게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 본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선언’은 2년 가까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캐나다 FTA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걸림돌(덜 브레이크)’ 제거작업이라는 것이 더 정확한 분석이다.

한·캐나다 FTA의 걸림돌인 쇠고기 문제가 제거된다면 그 다음에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등급을 내린 EU 국가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오는 4월 초에 한·EU FTA가 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우병이 대량 발생한 EU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결국 신자유주의가 확대될수록 우리의 식탁 안전은 위험받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FTA와 광우병 이슈는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밥상의 안전을 지키고자 한다면 바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지면 관계상 내용 일부를 축약해서 실습니다. 전문은 <레프트21>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핵에너지)이 기후변화의 대안인가③

핵에너지는 비싸고 반환경적이며 위험한 군사 무기다

핵발전소를 늘려 기후변화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핵발전에 드는 비용이 너무 큰 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너무 적기 때문이다.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핵발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도입한 에너지 중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싼 에너지다. 주요 투자자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어마어마한 정부보조금을 쏟아 부어도 “신용 위험이 너무 높아져서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연방법안일지라도 이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모건 스탠리의 사무총장인 캐런 버드는 “우리는 계속 그 위험을 감수할 수 없으며, 투자회사들은 그 사태를 오래 기억한다”며 우려했다(헬렌 칼디코트, <<원자력은 아니다>>, 양문, 2007년).

당장 한국에서 핵발전소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만 해도 “현재 건설중인 8기의 원전 외에 … 10기의 발전소를 추가로 지어야 하지만 마땅히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지난 7월까지만 2조 3천9백억 원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 같은 비용은 특별회계나 전기료에 전가되는 방식 등을 통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이투뉴스>, 2009년 8월 31일치.)

무엇보다 전 세계 어느 정부도 그 비용을 제대로 계산해 본 적이 없는 핵발전소 폐쇄 비용(수명이 다 되면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과 폐기물 처리 비용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든다.

핵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산출되는 것은 이런 비용을 모두 배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어떤 연구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핵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지원된 정부 재정을 모두

포함해 발전 단가를 따져본 결과, 심지어 현재가 동종인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보다 훨씬 비싸다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게다가 자연에 풍부한 바람, 햇빛과 달리 우라늄은 무척 귀한 광물이다. 핵발전이 확대될수록 원료 비용은 가파른 속도로 비싸질 것이다.

잠금효과

한편, 핵발전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소보다 배출량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핵산업은 우라늄 채취에서 수송, 농축, 재처리 등 그 공정 곳곳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한 예로 세계 우라늄 농축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켄터키 주의 파두카에는 오로지 우라늄 농축만을 위해 가동되는 화력 발전소가 두 개 있는데 각각 1천 메가와트 용량이다. 이는 어지간한 핵발전소의 발전 용량에 맞먹는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자주 인용하는 자료에서도 원자력의 전과정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0그램 정도로 경쟁 에너지인 해양풍력의 21그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진우, <시민사회신문>, 2007년 10월 22일치)

그리고 “핵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진정한 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투자를 늘리지 못하게 만드는 ‘잠금효과’를 낸다.”(이현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따라서 핵발전 확대로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순전한 거짓말일뿐 아니라 시장 논리에 비취 보더라도 핵발전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이 점에서 <한겨레21> 793호와 796호에 실린 두 편의 글이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로 생

겨날 경제적 이득에 대한 기대가 심하게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한 것은 옳다.

그러나 핵발전을 대안으로 삼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단지 경제성 때문만은 아니다. 핵에너지는 태어날 때부터 무기를 위해 태어났고 지금도 각국이 핵을 둘러싸고 벌이는 모든 활동은 그들의 핵무기 보유 동기와 분리돼 있지 않다.

또한 각국 정부들이 언제나 단기적인 경제적 동기로만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현실과 다르다. 오바마 정부도 최근 조지아주 버크 카운티에 건설되는 원자력 발전소 두 기에 83억 달러의 대출 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프레시안), 2월 17일치).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을 단순히 수지타산이 안 맞다는 식으로만 비판하는 것은 핵발전 확대 계획의 진정한 동기와 그것이 낳을 위험을 간과하는 것이다. 핵발전소 수출 계약이 성사된 뒤 <한겨레> 사설의 논조가 하루 만에 수출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바뀐 것도 이런 관점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레프트21> 22호에 실린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수주, 좋아할 일 아니다’ 기사를 보시오).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에 핵을 들여놓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험을 낳을 것이다. 설사 발전소 건설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수익을 올리더라도 이는 핵발전소 수입 국가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다.

한국의 반핵운동은 수익성 논리에 갇히기보다는 핵 자체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

장호중 기자 rednuc@left21.com

논설

집권당의 분열이 정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집권당이 심각하게 분열하고 있다. 친이계와 친박계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살벌한 쟁투를 벌이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들이 상대방을 향해 주위 담긴 힘든 말을 너무 많이 내뱉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강도론’을 놓고 날선 설전을 벌였고, 급기야 ‘막말’까지 나왔다.

정보기관이 박근혜를 뒤통사했다는 사실까지 폭로됐다. 정보기관이 진보 단체와 인사 들만이 아니라 집권당의 실세까지 사찰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위기 의식 정도를 짐작케 한다.

지금 한나라당은 함께 살자니 죽을 맛이고 갈라서자니 뒷감당이 안 되는 상황인 듯하다. 확실히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난관에 봉착했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이 돌이킬 수 없는 분당으로 향하게 되리라고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계속되는 두 분파의 타격전이 이명박 정부를 위협한 순간으로 내몰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집권당의 분열은 이명박 정부의 지배력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판’이라는 말까지 한다.

위기에 몰린 이명박 정부는 속죄양을 찾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청소년을 공격하고 있다.

이명박은 중학교 졸업생들의 ‘알몸 졸업식’이 “충격”이라고 했다. 일부 청소년들의 행위를 사회의 도덕적 위기와 연결시키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요즘’ 청소년들을 걱정하게 만들어 도덕성의 위기와 규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려는 시도다.

이것은 당장에 청소년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좌파를 겨냥할 것이다. 우파들은 벌써부터 전교조가 무분별하게 인권과 민주주의를 주장해 학교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문화”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난한다.

이것이 노리는 바는, 일부 청소년들의 행위를 공격해 법과 도덕의 질서를 강력하게 다시 세우려는 것이다.

설날 연휴 동안에 경찰이 이주노동자 식당을 급습해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연행해 간 것도 또 다른 속죄양 찾기다.

진보진영은 이명박 정부의 위기 탈출용 속죄양 삼기를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속죄양

이명박 정부는 집권당의 분열이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지방선거의 패배를 부를까 봐 전전긍긍한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를 낙관하지 못한다.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의 장이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처럼 정치적 무리수를 뒤 가면서까지 저항의 예봉을 꺾고 싶어 한다.

민주노동당이 단호하게 대응한 덕분에 정부의 1차 공격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계속되고 있고 노동자 투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정부가 이렇게 노동계급의 조직된 부문을 공격하는 것은, 이 정부가 강력하다는 뜻이 아니라 본격적인 계급 전투가 임박했다는 뜻이다.

정부와 기업주 언론들은 한국 경제가 회복하고 있다고 선전하지만, 지난 2월 ‘사실상 실업자 수’는 4백 61만 명이다. 1997년 IMF 이후 최고치다.

게다가,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한진중공업과 금호타이어는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해고하려 한다.

그러나 저항도 있다.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에 맞서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도 투쟁의 액셀러레이터를 밟기 시작했다.

세익스피어는 “인간사에는 항시 밀물과 썰물이 있으니 그 두개의 물 중에서 밀물을 타면 성공에 이른다”고 했다.

집권당이 심각한 불화를 겪는 지금, 진보진영은 이런 노동자 투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운동을 진지하게 건설할 필요가 있다.

